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 士 學 位 論 文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원인에 관한 연구

- 연평도포격사건을 중심으로 -

高麗大學校 大學院

政 治 外 交 學 科

成 河 胤

2012年 12月 日

李 東 銑 教授指導
碩 士 學 位 論 文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원인에 관한 연구

- 연평도포격사건을 중심으로 -

이 論文을 政治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2年 12月 日

高麗大學校 大學院
政 治 外 交 學 科
成 河 胤



成河胤의 政治學 碩士學位論文
審査를 完了함.

2012年 12月 日

委員長 이 동 선 (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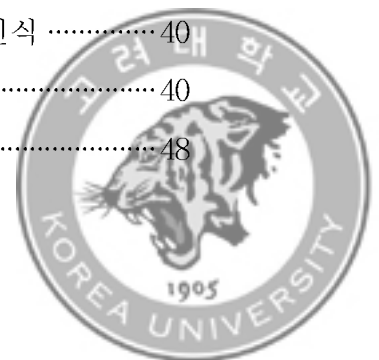
委 員 이 용 욱 (印)

委 員 김 동 훈 (印)



목 차

제 1장 서 론	1
제 1절: 문제 제기	1
제 2절: 선행 연구 검토	7
1) 김정일 개인 수준의 분석	7
2) 북한 국내정치 수준의 분석	12
3) 국제체제 수준의 분석	16
4) 북한 국내정치와 국제체제 수준의 연계를 통한 분석	20
5) 선행연구의 한계	21
제 3절: 연구 방법 및 사례 선정	23
1) 연구 방법	23
2) 사례 선정	24
제 4절: 논문의 구성	27
 제 2장 분석의 틀	28
제 1절 : 외부 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과 정권의 취약성	28
1) 외부 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	28
2) 정권의 취약성	30
제 2절: 가 설	32
 제 3장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39
제 1절 도발의 원인: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높은 인식	40
1)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높은 인식	40
2) 외부위협 완화 수단으로써 연평도 포격	48



제 2절 도발의 원인: 높은 정권의 취약성	56
1) 높은 정권의 취약성	57
2) 정권취약성 완화 수단으로서 연평도 포격	65
제 3절: 소 결	74
제 4장 2000년~2001년	76
제 1절: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낮은 인식	77
1)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77
2)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와 대북지원	82
제 2절: 낮은 정권의 취약성	84
1) 김정일의 확고한 이념적·실질적 정통성	85
2) 정권에 대한 지배엘리트의 높은 결속도	88
3) 정권에 대한 사회의 높은 결속도	91
제 3절: 소 결	93
제 5장 결 론	95
제 1절: 요 약	95
제 2절: 함 의	98
1) 정책적 함의	99
2) 이론적 함의	102
제 3절: 논의의 확장	103
참 고 문 헌	108



표 목 차

<표 1> 김정일 정권시기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25
<표 2> 변수의 수준에 따른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	38
<표 3> 남한의 인도적 대북지원	46
<표 4>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실적 (1995. 9~ 2002.12.31.)	83
<표 5>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88
<표 5-1> 1994년 이후 김정일 공개 활동 중 군 관련 행사	91
<표 6> 사례 분석 요약	98
<표 7> 김정일정권 시기 변수의 변화에 따른 대남 군사도발 ...	104
<표 7-1> 김정일정권 시기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발생 여부 ...	105



제 1 장 서 론

제 1절: 문제 제기

냉전의 종식과 함께 평화의 세계가 열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달리,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냉전종식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왔다.¹⁾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2002년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2009년 대청해전에 이어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과 한반도 영토를 대상으로 한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켰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로 한국의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한반도 전역에 안보 불안 문제가 가중되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렇게 위험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가? 과연 북한의 대남 군사 도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김정일 정권시기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의 원인을 일반적 분석의 틀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6·25전쟁 이후 북한의 도발 건수는 약 2,660회로 연평균 47회 정도 되며, 이중 해상 도발 건수는 1,430회 이다. 북한의 도발은 무력침공, 국경침범, 납치, 습격, 테러리즘(암살이나 폭탄 투여),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위협,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등이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용어사전에 따라 군사도발을 “군대, 군비, 전쟁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민과 재산 또는 영역에 가하는 일체의 위해”라고 정의한다. 시기와 범위는 김정일 정권시기(1994~2011)에 일어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로 한정한다. Hannah Fishcher, Information Research Knowledge Services Group, “North Korean Provocative Actions: 1950-2007,” *CRS Report for Congress*, (April 2007);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2006), p.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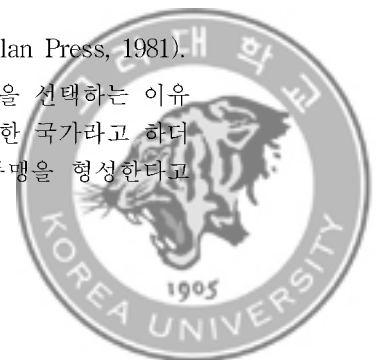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원인에 관한 본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학술적·정책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본 연구는 국제정치학에서 고전적이고 중요한 연구주제인 국가의 힘(power)과 무력의 사용(the use of force)에 관한 기존 연구를 보완함으로써 이론의 설명력을 높일 것이다. 국가의 힘과 무력의 사용에 관한 기존 연구는 힘과 무력의 사용을 비례의 관계로 보고 국가가 힘이 커지면 자신의 역량을 더욱 높이고 외부환경을 통제하여 안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국가가 역량이 쇠퇴하여 힘이 약해지게 되면 국가는 외부환경을 통제하려는 야망이 줄어들어 무력사용을 자제하게 된다.²⁾ ‘포함외교(Gunboat Diplomacy)’의 경험에서 보더라도 군사적 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무력시위는 강대국이 약소국에 취한 정치행위였으며,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군사적 모험을 선택하는 것은 예외적 현상에 속했다.³⁾ 따라서 국가의 힘과 무력사용에 관한 기존의 논의에 따르면 남한에 비해 물리적으로 열세에 놓인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기존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기존연구의 한계는 국가의 힘과 무력의 사용이 기존의 논의처럼 단순히 힘과 같은 물리적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대

2)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 95; Thazhakuzhyil Paul, *Asymmetric Conflicts: War Initiation by Weaker Pow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 5.

3) James Cable, *Gunboat Diplomacy 1919-1991* (London: Macmillan Press, 1981).

4) 월츠(Kenneth N. Waltz)는 국가가 동맹을 통해서 균형화 정책을 선택하는 이유를 ‘상대적 권력’의 차이라고 보았지만, 월츠는 권력 면에서 약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더 위협적인 존재라고 인식할 경우 위협에 대항하여 동맹을 형성한다고



남군사도발 원인을 단순히 물리적 요소가 아닌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이나 ‘정권의 취약성’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를 통해서 설명함으로써 기존의 국가의 힘과 무력사용에 대한 논의의 설명력을 확장하고자 한다.

둘째로 본 연구는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의 원인을 일반적 분석의 틀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북한 대남군사도발 연구의 이론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의 원인에 관한 연구들은 이론적 정교함과 깊이 있는 경험적 분석을 결여한 채 매도발마다 일관성 없는 분석을 내어 놓았는데, 이로 인해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이 발생한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에 관한 체계적이고 통합된 이론이 부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의 원인을 일반적 틀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기존연구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다.

셋째로 본 연구는 북한의 군사도발의 원인에 관한 일반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정부가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을 예측하고 전략적 대응방안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에 관한 연구들은 깊이 없는 정책보고서나 저널리즘 수

본 것이다. 이처럼 월트는 국가들이 균형화 전략이나 편승전략을 선택하는 등 국가행동의 근본적인 이유를 국제체제의 주어진 구조로 인한 ‘상대적 힘의 배분’의 차이가 아닌 ‘위협에 대한 인식’으로 봄으로써 국가가 더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국가, 즉 위협의 근원에 대응하여 동맹을 맺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월트의 주장은 국가 행동의 원인이 단순히 물리적 힘과 같은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함과 동시에 비물질적 요소인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 또한 국가 행동의 중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p 5-25.



준에 머물러 있거나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되어 있었다. 특히, 북한의 군사도발에 관한 연구들은 군사도발이 발생하게 된 책임을 따지는데 지나치게 경도되어 정작 북한의 대남군사도발 원인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못했다. 천안함 폭침사건이후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의 책임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한국정부는 천안함폭침사건에 대한 정치적 논쟁으로 북한의 도발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추후 도발을 방지할 억지전략을 구축하지 못했고 결국 연평도포격이라는 추가 도발에 직면했다. 중요한 것은 북한 군사도발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억지전략을 수립하는 것임에도 북한군사도발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갈 길을 잃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정쟁에 매몰되어 정확하고 깊이 있는 분석이 이뤄지지 못했던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에 관한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북한의 군사도발의 원인에 관한 일반적 분석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추후 한국이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억지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사전에 강화하여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에 관한 정밀한 분석틀이 구축될 경우 한국정부는 일반적 틀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북한이 대남군사도발을 할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 졌다고 판단했을 경우, 주변국에 사전 협조를 요청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지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⁵⁾ 따라서 북한

5) 최근 개최된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랑광레 중국 국방부장이 북한을 향해 모험을 하지 말라고 설득함으로써 사전에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남군사도발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이뤄질 경우, 대남 군사도발이 발생할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사전에 주변국의 협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할



의 대남군사도발원인에 대한 일반적 분석의 틀을 제공하는 본 연구는 주변국들에게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2012년 권력변동이 있는 중국, 러시아, 미국, 한국에게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 정권시기 북한이 왜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하였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국제체제수준의 변수인 ‘외부위협의 수준’을 높다고 인식하고, 국내정치적 수준의 변수인 ‘정권의 취약성’이 높을 때 두 변수의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군사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국제체제변수인 ‘높은 외부위협의 수준’과 국내체제변수인 ‘높은 정권의 취약성’ 두 변수가 모두 존재할 때 북한이 대남군사도발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두 변수 중에 하나의 변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대남군사도발을 감행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북한은 ‘외부위협수준’을 높다고 인식할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고강도 강압수단으로써 대남 군사도발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정권은 ‘정권의 취약성’이 높은 상황에서 ‘외부위협수준’이 높다고 인식할 경우 정권의 생존이 위기에 있다고 느끼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외부위협수준을 완화하는 것은 정권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북한은 한국·미국·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외부위협 수준을 완화할 것을 압박한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압박에도 주변국들이 ‘외부위협’수준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고

방법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 『중앙일보』, 2011. 6. 6.



강도 강압전략으로써 대남 군사도발을 선택한다. 대남군사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극대화하고 확전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자극하여 북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면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정권의 취약성’이 높은 수준에 있을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남군사도발을 선택한다. 북한 ‘정권의 취약성’은 정권의 이념적·실질적 정통성이 취약하고 지배엘리트와 주민들이 정권에 대해 이완되어 있을 경우 높은 수준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정권의 취약성을 완화하는데 효과적 수단이 된다. 첫째로 ‘선군사상’을 중심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이뤄야 하는 북한에게 대남군사도발은 취약한 이념적·실질적 정통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실제적 업적이 될 수 있다. 둘째로 ‘외부의 적과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인 대남군사도발을 통해 내부적으로 지배엘리트들의 단결을 도모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위험감수적인 정책인 군사도발을 통해 충성스러운 엘리트와 정권에 이완되어 있는 엘리트를 가려냄으로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분열도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대남군사도발을 통해 경제난 등의 북한내부문제로 인한 주민들은 높은 불만을 외부위협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정권에 대한 사회결속을 도모하여 정권의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이 ‘외부위협 수준’을 높다고 인식하고 ‘정권의 취약성’이 높을 때 이 두변수의 수준을 완화할 목적으로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주장이다.



제 2절: 선행 연구 검토

북한의 대남 군사적 도발의 원인을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는 김정일 개인수준의 분석, 북한 국내정치수준의 분석, 국제체제수준의 분석, 북한국내정치와 국제체제수준의 연계를 통한 분석 등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북한의 대남군사 도발의 원인에 관한 선행연구와 그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1) 김정일 개인 수준의 분석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의 원인에 대한 첫 번째 연구는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의 원인이 김정일 개인의 특징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으로, 이들은 공통적으로 북한과 같이 국가의 규모가 작고, 후진국이며, 폐쇄적인 국가에서는 최고정책결정자의 의지와 선택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들은 김정일 정권시기 북한의 대남군사도발과 관련해서도 김정일 지도자 개인의 특성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고 본다.⁶⁾ 이와 같이 대남군사도발에 있어서 지도자 개인의 특성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는 분석은 김정일

6) 샤피로(Michale J. Shapiro)와 본햄(G. Matthew Bonham)은 “정책결정자들의 믿음체계 외교정책을 연구하는데 핵심적인 주제이며, 다른 어떤 요인보다 정책적 차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언급을 통해서 외교정책결정에서 ‘정책결정자의 믿음체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외교정책결정도 ‘최고정책결정자’의 세상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렌즈’를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한국가의 외교정책을 살펴보는데 있어 최고정책결정자의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Michael J, Shapiro and G. Matthew Bonham, "Cognitive process and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17 (June 1973), p.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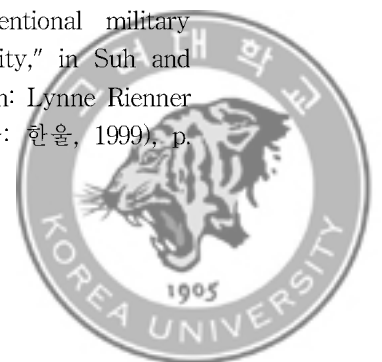


개인을 비합리적으로 보는 시각과 합리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⁷⁾

먼저, 북한의 대남군사도발 원인이 김정일 개인의 비합리성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보는 분석은 김정일 개인의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심리적 경향을 가정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김정일이 권위적이고 비밀 주의적이며 '악하고(bad)' '불편(sad)'하기 때문에 대남군사도발을 감행했다는 주장에서부터 김정일 개인이 '정신병자(mad man)' 또는 편집광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까지 그 수준이 매우 다양하다.⁸⁾ 이들은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이 김정일 개인의 비합리적 성격에서 기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의 외교정책 또한 비합리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평상시나 위기시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 행태를 보이는 북한의 외교행태는 예측 불가능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고 본다. 이처럼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이 김정일 개인의 비합리성에서 기인했다는 주장은 학문적 연구보다는 한국과 미국의 정치인들의 발언 속에서 더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 페리 전 국방장관, 클린턴 전 대통령, 부시 전 대통령의 언급이 대표

7) James N. Rosenau, "Pre-theories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y," *The Foreign Policy* (New York: Nichols Publishing Company, 1980), p. 130. ; 김태운,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대외인식과 북한 외교정책," 『한국동북아논총』, 34권 (2005), pp. 121-140.

8) Robert A. Manning, "The United States in North Korean Foreign Policy," in S. Kim (ed.), *North Korean Foreign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Hong Ko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1998), p. 141. ; Edward A. Olsen, "The Arms R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ian Survey* Vol. 26, No. 8(August 1986), p. 851; Edward A. Olsen, "The conventional military strength of north korea: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security," in Suh and Lee, (eds.), *North Korea after Kill Il Sung*, (Boulder/London: Lynne Rienner, 1998) p.147.;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p. 308.; 『조선일보』, 1997. 4. 22.



적이다.⁹⁾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이 김정일 개인의 비합리성에서 기인했다고 보는 연구와는 반대로 김정일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북한이 군사도발을 일으켰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국가의 목표와 제약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이익과 정권의 이익을 구분해서 본다면 북한의 호전적 행동은 북한이 ‘자기 보존’이라는 정권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합리적 선택이라고 주장한다.¹⁰⁾ 북한은 정권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제한된 정치적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1968년과 1983년 남한의 지도자 암살시도와 1988년 폭탄테러를 통해 실제 적은비용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것을 얻은 이래로 군사도발이 효과적 수단화 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¹¹⁾ 이처럼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을 김정일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보는 시각은 오히려 김정일을 비합리적으로 보는 것은 북한정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한 것이며, 남한과 미국과 같은 평양의 적들에 의해서 자기강화적(self-reinforcement)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북한이 한반도 적화를 목표

9) William M. Drennan, *Mistrust and the Korean peninsula: dangers of miscalculation*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for Peace, Nov. 1998), p. 2.; Bill Clinton: "Remarks to Future Leaders of Europe in Brussels January 9, 1994,"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http://www.presidency.ucsb.edu/ws/?pid=49643>. (검색일: 2012. 4. 20.);

10) Denny Roy, "North Korea and the 'Madman' Theory," *Security Dialogue*, Vol.25, No. 3(September 1994), pp. 307-309.; Hazel Smith "Bad, Mad, Sad or Rational Actor? Why the 'Securitization' Paradigm Makes for Poor Policy Analysis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Affairs* Vol. 7, No 6 1(January 2000), pp. 111-32.

11) Roy, *ibid.*, pp. 310-311, 빅터차·데이비드 강, 『북핵퍼즐: 빅터 차 vs. 데이비드 강 관여전략 논쟁』 (서울: 따뜻한 손, 2007), p. 44.



로 하고 있는 '악하고(bad)' 합리성과는 무관한 '미쳐있는(mad)' 국가라서 이기 보다는 정권의 목표달성을 위한 김정일의 합리적 선택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와 같이 김정일 개인변수의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통해서 북한이 대남군사도발을 설명하려는 연구는 네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첫째는 연구가 실제로 김정일 개인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정일 개인의 심리나 언급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김일성 사후 북한의 신년사, 발표된 논문, 김정일 개인의 저작 또는 대외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행태 등인데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도 김정일 개인의 대외관은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저작이 김정일의 업적을 우상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김정일 개인의 의중을 알 수 있는 언급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 객관성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김정일 개인변수로 설명하려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부분 추측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¹²⁾

둘째는 모든 설명을 김정일 개인의 심리로 설명함으로써 북한의 어떤 행동도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결국 모든 것을 사후적으로 설명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이 김정일의 극단적 심리나 폭력성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김정일 개인의 심리가 정상화되지 않는 이상 대남군사도발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김정일의 정신병적 증세나 편집증을 고치지 못하면 앞으로 북한의 행동을 예측한다는 것도 그에 대응하는 것도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세 번째는 주장 자체가 반사실적(counterfactual) 추론에 근거

12) 김태운, 앞의 책, p. 126.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김정일 개인의 비합리성과 합리성이 북한 대외정책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한다면 다른 지도자가 부상할 경우 북한대남군사도발에 있어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이어 오늘날의 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행태의 별다른 변화 없이 남한에 대한 군사도발을 계속해서 감행하고 있다. 이것은 김정일 개인의 특성 외의 다른 상황적인 변수로 인해 대남군사도발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¹³⁾

마지막으로 김정일 개인변수로 설명을 하려는 연구들은 북한의 대외정책결정과정에서 김정일 개인에게 권한이 집중된 순응적 결정과정이기 때문에 관료정치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전제하는 문제가 있다.¹⁴⁾ 물론 북한과 같은 세습독재주의 국가에서 지도자 개인의 변수가 절대적 역할을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북핵 위기 시 정책결정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군부와 외교부간의 관료제 정치의 존재는 김정일 개인 변수로만 북한의 행태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¹⁵⁾ 특히,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로 세력계

13)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 Addison-Wesley, 1979), p. 61.

14) 김진무, “북한의 대남정책결정과정에서 군부의 역할,” 『통일정책연구』 제 11권, 제2호 (2002).; 유호열, “북한외교정책의 결정구조와 과정,” 양성철·강성학 공편, 『북한외교정책』 (서울: 서울프레스, 1995), pp. 58-59.

15) 제네바 협상 중에는 북한 외교부와 군부 간의 견해 차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외교부는 기본 합의문에서 미국과 약속한 합의 사항들을 수호하고 추진하는데 열의를 보였지만 군부의 기본적인 관심사는 국경방위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외교부와 군부의 갈등의 존재는 북한 내부에도 관료정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Don Oberdorfer, 이종길 옮김, 『두개의 한국』 (서울: 길산, 2002), p. 523.; Alexannder Mansurov, “North Korea Desition Making Process Regarding the Nuclear Issue at Early Stages of the Nuclear Game,” in Young Whan kihl and Peter Hayes (eds.), *Peace a*



승과정이나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으로의 세력계승을 보면 놀랄 만큼 순조로운데, 이는 북한내부에도 관료정치가 작동하고 있음을 증거 한다고 볼 수 있다.

2) 북한 국내정치 수준의 분석

두 번째 북한군사도발의 원인에 관한 연구는 북한 내부 정치적 요인에서 북한의 군사도발이 기인한다고 가정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들은 북한정권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 북한이 대남군사도발을 감행한다는 관점과 북한 내부의 강경한 군부의 부상으로 대남 군사도발이 발생했다는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북한 정권의 본질이 대남 군사도발의 원인이라고 보는 연구들은 북한이 ‘수령절대주의’와 ‘선군독재’라는 북한정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대남군사도발을 감행한다고 본다.¹⁶⁾ 이들은 북한정권의 가장 중요한 이익은 김정일 개인에게 권력이 고도로 집중된 ‘수령절대주의’와 수령의 권력 보호를 위해 군대를 핵심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선군독재’라는 정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⁷⁾ 북한이 ‘수령절대주의와’ ‘선군독재’라는 북한정권의 본

Security in Northeast Asia: the Nuclear Issue and the Korean Peninsula (Armonk: M. E. Shape, 1997), pp. 220-223.; Patrick McEachern, *Inside the Red Box: North Korea's Post-totalitarian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16) 오경섭, “북한정권의 본질과 대남도발의 함수관계,” 『2011 대북정책 Symposium:북한 체제지속여부와 대북정책과제』, (2011); 문순보, “천안함 도발, 연평도 포격: 원인과 교훈,” 『2011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안보국방 학술회의』, (2011).

17) 황장엽,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 (서울: 시대정신, 1999), p. 96.



질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선군정치의 정당화, 수령에 대한 군부의 지지 확보, 안정적 후계계승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매우 한정되어 있는 북한에게는 대남군사도발이 정권의 본질을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과 미국이라는 외부의 적에 대한 실제적인 대응인 대남군사도발을 통해 북한이 ‘선군독재’를 정당화하고 수령에 대한 군부와 인민들의 내적단결을 이끌어 내어 ‘수령절대주의’와 ‘선군독재’라는 정권의 본질을 수호하고자 대남군사도발을 감행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정권의 본질보다는 대남정책결정과정에서 강경한 군부의 역할과 영향력이 확대되어 상대적으로 군사적 수단이 선호됨으로써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이 발생했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¹⁸⁾ 이들은 북한의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더 이상 김정일 개인의 독단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 이뤄지지 않으며 북한 내부에도 관료정치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¹⁹⁾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김정일 정권시기 ‘선군사상’의 출현과 함께 현저히 증대된 군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은 1998년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고 ‘선군정치’를 북한 정치의 기본방식으로 규정하면서 다수의 군부가 당과 국가의 최고의 사결정기구에 참여하여 안보와 관련된 제반 정책결정 과정에서 군부가 핵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²⁰⁾ 이와 같이 확대

18) 임재형, “북한외교정책결정과정의 특징과 군의 역할: 김정일 시대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 6권, 제 1호(2002), p. 59; 김열수,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 심리전인가, 실체인가?” 『통일로』, (2009).

19) 임재형, 앞의 글, pp. 52-53.

20) 김구섭, 『김정일의 군 인맥 및 군사정책 결정구조 분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6), p. 68.



된 군부의 역할과 비중으로 북한이 정치논리보다는 군사논리에 더 충실하게 되었으며, 북한의 대남 정책의 무게중심도 회담이나 협상보다는 군사적 공작과 침투로 이어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²¹⁾ 즉, 북한 내부에서 강경한 군부의 역할과 권력증대가 결국 북한의 대남군사도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 내부 정치적 변수로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을 설명하려는 연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먼저, 이러한 연구들은 대외적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북한정권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은 지속될 것이라 전제한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외부환경이 북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북한정권의 본질인 ‘수령절대주의’와 ‘선군독재’를 안정적으로 수호할 수 있다면 북한은 군사도발을 감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하지만 2002년 2차 연평해전을 보면 북한이 단순히 내부 정치적 변수로 대남군사도발을 감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2년 2차 연평 해전이 발생했던 시점, 북한은 2000년 ‘고난의 행군’의 극복을 선언하면서 여전히 정권의 취약성의 문제는 존재하였지만 북한정권의 본질을 지키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하지만 2002년 들어서 미국의 부시정권이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이라 지칭하며 외부위협을 수준을 높이자 북한은 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다.²²⁾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북한정권의 본질을 지킬 수 있었

21) 김열수, 앞의 글, pp.12-13.; 『세계일보』 2002. 5. 6.

22)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 29일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하고 대량파괴 무기(WMD)위협을 경고하였다. 9.11 테러사건 직후 부시 대통령은 대 테러전쟁의 두 가지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수출하는 북한은 반드시 제어해야 할 대상이었고 제어수단으로는 대화와 힘 모두가 거론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인해 남한의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외부위협을 수준



음에도 북한이 대남군사도발을 감행한 사례로서 단순히 북한의 내부적 변수만으로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을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이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호적 외부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북한의 군사도발은 단순히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북한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상 남북관계와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에 즉, 국제체제의 환경에 크게 제약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한·미·중의 구도가 북한의 고립을 유도하고 북한을 압박하여 북한에게 불리한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면 이는 대외적 명성유지와 업적 과시를 통해 대내적으로 수령절대주의와 선군독재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북한에게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정권의 안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외적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대남군사도발을 전략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두 번째로 북한내부의 강경한 군부의 역할과 비중의 현격한 증대가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은 김정일이 군권과 당권을 전일적으로 장악하고 모든 정책이 김정일을 통해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기 어렵다. 김정일이 ‘선군사상’을 국가의 핵심사상으로 규정하고 권력구조개편을 통해서 군부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군부의 비중이 현저히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도 북한의 중요한 정책결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김정일은 자신의 정권의 유지를 위해 제 2인자의 존재조차 부정하고 있으며, 주변의 핵심 군부엘리트들조차 의

을 매우 높게 인식했다. 『주간한국』, 2002. 2. 25.



사결정에 있어 최소한의 권한도 지니지 못한다. 최고지도자인 김정 일에게 정책결정에 관한 모든 보고가 집중되며, 정책결정구조 측면 에서도 군부가 정치국과 상무위원 등 당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다수 진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정책결정에 있어서 영향력 확 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군부의 역할과 비중이 현격히 확대되 었다고 하더라도 군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직접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하여 북한을 대남군사도발로 이끄는 것은 정황상 불가능한 논 리라고 볼 수 있다.²³⁾

3) 국제체제 수준의 분석

세 번째 북한군사도발의 원인에 관한 연구는 대북정책이나 외 부위협 수준 등 외부 환경적 요인에서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이 기 인한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연구는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이 북 한에 대한 유화적 기조나 정책에서 기인했다고 보는 시각과 강경한 기조나 정책에서 기인했다고 보는 두 시각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외부의 북한에 대한 유화적 기조나 정책에서 북한의 대 남 군사도발이 발생했다고 보는 시각은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에 보 상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남한의 억지력이 취약 해져 대남 군사도발이 발생했다고 본다. 이들은 김대중 정권의 ‘햇 별정책’과 노무현 정권의 ‘평화번영 정책’이 북한의 협력의지를 지나 치게 이상적으로 가정하고 ‘화해, 협력, 교류를 통한 북한변화’를 대 북정책의 유일한 정책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정권 스스로 정책적 유

23) 김진무, 앞의 글, pp. 87-116; 고유환, “북한의 대내 정치와 대남정책의 상관성 분석,” 『통일경제』, 제 25호, (1997), pp. 42-52.



연성과 탄력성을 포기했다고 지적한다. 그 동안의 유화적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 그림 없이 교류와 협력만을 확대하고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에도 지속적으로 조건 없는 지원을 해왔는데, 이들은 이와 같은 남한의 물리적 지원이 북한의 안보적 이득으로 전용되어 결국 북한정권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북한이 무력에 의해 체제 보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주장한다. 즉, 남한의 ‘조건 없는 지원’이 대북 억지전선을 약화시킴으로써 북한의 호전성을 키웠다는 것이다.²⁴⁾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북한에 대한 강경한 기조나 정책이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의 동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다. 이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시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시각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안보불안에 직면한 북한이 외부의 압박에 반발하여 대남군사도발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이 미국에게 안전보장을 원하며 한·미의 군사적 압박이 줄어들기를 원하나, 지속되는 한·미의 합동 군사훈련과 대북압박은 북한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북한의 호전적 언사나 대남군사도발은 안보불안에 직면한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이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억지와 방어차원에서 이뤄지는 시도라고 본다.²⁵⁾

두 번째 시각은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이 단순한 외부 압박에 대한 반응이 아닌 불리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여 북한에게 유리한

24) 최완규,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韓國民族文化』, (1999); 박용욱,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 기본 과제와 제언," 『New Asia』, (Spring, 2008), p. 18. ; 정경환, "김대중 정권 대북정책의 비판적 고찰," 『통일전략』, 제 11권, 제 2호, (July, 2011), pp. 61-62.

25) 『경향신문』, 2011. 12. 25. ; 빅터 차, 앞의 책, p. 78.



방향으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위기조성’차원의 전략으로 선택되었다는 주장이다.²⁶⁾ 이들은 북한을 둘러싼 국가들과의 교류단절과 위협, 엄포는 북한의 상황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북한이 현재의 상황을 유지할 경우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므로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기 보다는 위험도가 높은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²⁷⁾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북한은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으면서 현재의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제한적인 무력행사 전략인 대남군사도발을 선택하게 되는데,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은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들 중 어떤 나라도 북한의 군사도발이 확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과적 강압전략이 된다. 확전을 원하지 않는 주변국들은 비난성명의 수준에서 북한의 처벌을 마무리 짓고 동북아에 고조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협상의 테이블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정치적 역학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북한이 이와 같은 상황을 적절히 이용하여 주변국으로부터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고 국면을 전환하고자 대남군사도발을 감행한다고 주장한다.²⁸⁾

이처럼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의 원인을 북한외부변수에서 찾고 있는 연구들은 북한 내부 정치적 역학에 대한 고려 없이 북한 외부

26) Jung-Hoon Lee and Il Hyun Cho, "The North Korean Missiles: A Military Threats or a Survival Kit?,"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12, No. 1 (2000), p. 133; 미찌시마 나루시게, "북한외교와 군사력의 역할,"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신종대, "북한 위기조성전략의 분석과 전망," 『한반도 정세: 2010년 평가와 2011년 전망』, (경남대국동문제연구소, 2011); 조재욱 · 이재성 · 박경우 · 주성열, "북한의 위기조성전략에 관한 고찰: 전망이론에 의한 인식론적 접근," 『국방연구』, 제 54권, 제3호, (2012).

27) 빅터 차, 앞의 책, p. 116.

28) 조재욱, 앞의 글, pp. 72-75.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북한의 대남 도발이 결정된다고 본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²⁹⁾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외부위협 수준이 완화되거나 북한에 대해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경우 북한은 군사도발을 감행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북한에 강경한 입장이었던 김영삼 정권에서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김대중의 유화적 정권으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은 계속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외부 변수만을 통해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한국의 이명박 정권과 미국의 오바마 정권에 들어와서는 외부환경이 북한에게 계속 불리하게 조성되고 북한에 대한 위협의 수준도 매우 높았는데 항상 대남군사도발이 발생했던 것은 아니었다. 북한이 천안함포격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을 일으킨 것은 2008년 김정일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시작된 불안정한 세력계승으로 인해 대내 정치 또한 불안정했을 시기였다. 이것은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이 외부변수 외에 북한의 대내적 정치적 역학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하며, 외부 변인만으로 군사도발을 설명할 경우 북한군사도발의 단면만을 조명하는 한계를 지닌 연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29) 북한의 대남정책 연구는 북한 내부의 신뢰성과 객관성 있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국제체제 수준의 분석에 치우쳐 있다. 김용오·명석영, “북한외교정책연구의 국내외 경향의 분석과 대안의 모색,” 『통일문제연구』, 제 48호 (2007), p. 46.



4) 북한 국내정치와 국제체제수준의 연계를 통한 분석

네 번째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원인에 관한 연구는 북한 내부변인과 북한 외부변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남군사도발이 발생했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연구는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후계세력 계승’과 ‘선군독재’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정권의 안보를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축소된 지원과 대북압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여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대남 군사도발을 전략으로 선택했다고 주장한다.³⁰⁾ 즉, 북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북한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인데, 군사도발이 대내적으로는 ‘선군사상’이라는 기치아래 안정적 세력계승과정을 도모하는데 있어 효과적 수단이 되고, 대외적으로는 강경한 대북정책에 직접적 압박을 가하면서 북한에 유리한 국면으로의 전환에 유리한 수단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북한의 군사도발의 원인을 북한 내부 정치적 역학과 북한 외부환경의 변수 모두를 통해 설명을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하나의 변수만으로 설명을 시도한 연구보다는 더 많은 설명력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도 여전히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두 변인을 고려한 연구가 아직까지 양적으로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원인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국내정치적 변수나 국제체제수준의 변수 둘 중 하나의 변수만을 가지고 대남군사도발 시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두 변수 모두를 고

30) Dong Sun Lee, "Causes of North Korea Belligerence,"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66, No. 2, (April 2012).; 정재욱, "북한의 군사도발과 전략적 과제," 『2011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 안보국방학술회의』 (2011).; 신종대, 앞의 글.



려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초기 수준의 불과하다.

두 번째는 질적으로도 충실한 연구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국내정치적 변인과 국제 체제적 변인을 분리하여 각각 다루고 있을 뿐 국내외적 두 변인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역학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론적으로 정교한 틀에 의한 분석을 결여한 채 각각의 사례마다 다른 설명을 시도하고 있어서 북한의 군사도발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찾아보기 어렵다.³¹⁾

5) 선행 연구의 한계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의 원인에 관한 네 가지 분야의 기존연구를 살펴본 결과 기존의 연구들이 지닌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에 관한 연구 중에 국제 체제적 요인과 국내 정치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아직까지도 부재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 군사 도발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외정책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국제체제 수준과 행위자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도발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북한 내부의 역학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의 부족과 북한외교정책을 북한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정책이 아닌 국제사회

31) 신중대의 경우 북한의 군사도발을 대외적으로는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강압적 수단으로 보고 이러한 수단이 대내적 단결 및 대내 정치 안정화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으나, 대외적 변인이 여전히 주요변인이며 대내적 변인은 대외적 변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에 그치고 있다. 즉, 대내적 변인은 부가적인 설명변수에 불과하다. 신중대, 앞의 글.



의 체제적 특성이나 구조로 인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한 경향으로 인해 국제체제나 국내정치적 요소 한 가지로만 설명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³²⁾ 대부분의 연구들이 하나의 변수에 치중되어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을 설명하거나 북한의 군사도발마다 각각 다른 수준의 변수를 통해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들어 두 변수 모두를 고려한 연구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양적·질적으로 부족하며, 이론적 정교함과 깊이 있는 경험적 분석을 통해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을 설명한 연구는 거의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체제수준의 변수인 북한의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과 그 동안의 연구들이 암 상자(black-box)속에 넣어 두었던 국내정치적 변수인 ‘정권의 취약성’을 가지고 일반적 분석의 틀을 통해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원인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대남 도발원인에 대한 보다 풍부한 설명력을 확보할 것이다.³³⁾

두 번째는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원인을 사회과학적 추론에 근거해 이론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북한의

32) 자력구제(self-help)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생존과 안보를 위해 스스로 힘을 추구해야 하는 국제체제의 설명의 중심에는 항상 ‘힘’(power)이 존재했고, 상대적으로 힘과 능력이 부족한 약소국(small power)은 주요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약소국의 외교정책은 ‘강대국에 대한 대응전략’인 강대국 정치의 산물에 불과했을 뿐 ‘자율적 선택’의 산물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북한관련 연구에서도 동일한 현상이었다.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1979), p. 162~163.;

33) 저비스는 행위자의 행동을 행위자가 처한 상황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내부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국내적 정책, 관료적 협상, 정책결정자의 우선순위 등 어떤 행동에 대한 설명 하나로만 결과를 유추해 내는 것도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처럼 내부적 과정을 들여다봄으로써 같은 환경에서 왜 다른 행동이 도출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Robert Jervis,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p. 32-33.



대남군사도발원인에 관한 연구들을 사회과학적 추론에 근거한 이론적 정교함을 결여한 채 ‘주체사상’과 같은 특정 이데올로기나 북한 정권 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인 김정일 개인의 호전성, ‘수령절대주의’와 ‘선군독재’등을 통해서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을 설명해 왔다.³⁴⁾ 이러한 분석은 학술적 분석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단순한 정책 보고서나 저널리즘 수준의 설명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의 원인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 사회과학적 추론에 근거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북한의 대외정책연구의 일반적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3절: 연구방법 및 사례선정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북한의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과 ‘정권의 취약성’을 독립변수로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의 원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북한의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과 ‘정권의 취약성’이라는 두 변수를 통해 대남군사도발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 정치역학에 대한 밀도 있고 구체적인 기술과 분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연구방법으로는 Congruence방법과 과정추적(Process-tracing)방법을 사용할 것이다.³⁵⁾

34) 전인영은 주체사상과 같은 특정 이데올로기와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최고 지도자 개인의 역할과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신정현은 주체사상 등의 특정 이데올로기, 정치구조, 경제 능력, 군사력 등을 중요 변수로 들고 있다. 전인영, “북한의 외교정책: 특징과 변화,”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 연구』 제 32권, 제1호 (1989).; 신정현, “북한의 신외교정책,” 전인영 편 『북한의 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p. 391-436.



Congruence방법을 통해 각각의 사례 속에서 북한의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과 ‘정권의 취약성’의 두 독립변수가 대남 군사도발이라는 종속변수와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와 동시에 과정추적방법을 통해 본고에서 제시한 북한이 대남군사도발을 감행하는 논리 즉, 인과적 메커니즘(Causal Mechanism)에 따라 북한의 대남 도발이 이뤄지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수준이 아닌 실제 북한의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이 높고 ‘정권의 취약성’이 높을 때 본고에서 제시한 인과적 메커니즘에 따라서 북한이 대남군사도발을 감행하게 되는가를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관련 자료로는 주로 『로동신문』의 기사와 사실, 『조선중앙통신(Korean Central News Agency)』의 사실, 『조선중앙방송』, 통일부에서 발간한 『주간북한동향』, 북한에서 발간된 북한 도서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2) 사례 선정

사례로는 북한의 ‘외부위협의 수준’에 대한 인식이 높고 ‘정권의 취약성’이 높았던 시기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Negative Case로 북한의 ‘외부위협의 수준’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정권의 취약성’이 낮았던 2000년에서 2001

35) Gary King, Robert Keohane and Sidney Verba, *Designing Social Inquiry: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p. 226~227.



년의 시기의 분석도 함께 진행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확실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시기의 모든 대남군사도발을 분석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소수의 사례를 깊이 있고 밀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풍부한 설명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한이 ‘외부위협 수준’을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정권의 취약성’ 또한 매우 높았던 시기인 연평도포격사건과 두 변수의 수준이 매우 낮았던 2000년에서 2001년 시기를 중심으로 본고의 주장을 검증할 것이다. 단, 아래의 <표 1>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김정일 정권 시기 발생한 모든 대남 군사도발은 북한의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이 높고 ‘정권의 취약성’이 높았을 때 발생하였기 때문에 본고의 주장과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김정일 정권시기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	정권의 취약성
제1차 연평해전('99. 6.15)	높음	매우 높음
제2차 연평해전('02. 6.30)	매우 높음	높음
대청해전('09.11.10)	높음	매우 높음
천안함피격사건('10. 3.26)	높음	매우 높음
연평도포격사건('10.11.23)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먼저, 본고에서 주요 분석 사례로 보고자 하는 연평도 포격 사건은 북한의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과 ‘정권의 취약성’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는 사례로써 본고의 주장을 가장 잘 검증해 줄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연평도포격이 발생하기 전 북한은 천안



함폭침 사건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한국과 미국의 계속되는 군사훈련, 중국의 불안정한 지지로 ‘외부위협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이끌어 내고 중국의 적극적 지원을 확보하여 외부위협 수준을 완화하고자하는 노력도 모두 실패로 귀결되면서 북한의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수준에 놓여 있었다. 연평도포격이 발생하기 전 ‘북한정권의 취약성’ 또한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다. 2008년 김정일의 건강악화로 갑자기 북한의 새로운 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은은 이념적·실질적 정통성이 부재했고, 북한의 지배엘리트들과 주민들 또한 북한의 새로운 정권인 김정은 정권에 대해 결속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북한의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과 ‘정권의 취약성’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던 연평도포격사례는 본고의 주장을 가장 잘 검증해 줄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연평도포격사례와는 반대로 2000년에서 20001년의 시기는 북한의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고 ‘정권의 취약성’ 또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다. 이 시기 북한이 미국, 한국, 중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을 이룩하고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해제와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북한의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다. 더욱이 김정일 정권이 김일성 사망 이후 ‘선군사상’과 ‘강성대국 건설’을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제시하여 이념적·실질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김정일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조직적·제도적 정비를 단행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배엘리트들과 주민들의 결속도 또한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다. 즉, 2000년에서 2001년의 시기는 북한의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과 ‘정권의 취약성’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는 시기로서 본



고에서 제시한 북한이 대남군사도발을 감행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여부를 검증해 줄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제 4절: 논문의 구성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이다. 제 1장에서는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그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제 2장에서는 북한이 대남군사 도발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논리적 분석틀과 북한이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이 높고 ‘정권의 취약성’이 높을 때 대남군사도발을 감행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제시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설의 구체적 인과적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도 이뤄질 것이다. 제 3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시한 분석의 틀을 적용하여 본고의 주장을 가장 잘 검증할 수 있는 사례인 연평도포격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제 4장에서는 제 3장과 동일한 분석의 틀을 사용하여 본고에서 제시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충족된 사례인 2000년에서 2001년 시기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함과 동시에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추후 연구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제 2장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국제체제수준의 변수인 ‘위협의 수준’을 높다고 인식하고, 국내체제수준의 변수인 ‘정권의 취약성’이 높을 때, 대남 군사 도발을 전략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국제체제변수인 북한의 ‘높은 위협의 수준’에 대한 인식과 국내 체제변수인 높은 ‘정권의 취약성’ 두 변수가 모두가 존재할 경우에 북한이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본 연구의 두 변수인 ‘외부위협수준에 대한 인식’과 ‘정권의 취약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원인에 관한 본고의 가설과 구체적 인과적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제 1절 : 외부 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과 정권의 취약성

1) 외부 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외부위협의 수준’을 높다고 인식 할 때 군사도발을 전략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기존의 국제관계이론은 국가가 다른 국가에 무력을 사용하거나 동맹을 맺는 주요원인을 ‘상대적 권력’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는데, 기존의 국가의 무력사용에 관한 설명으로는 남한보다 물리적으로 약세에 있는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을 일으키는 주요변수를 단순한 물리적 힘의 차이가 아닌 국제체제 수준의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의 수준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여기서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은 물리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 모두에 의해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은 상대방이 다른 편에게 물리적 또는 심리적 기제를 이용해서 영향을 미치려는 위협적인 행동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데, 이때 위협에 대한 인식은 경제제재나 군사조치 등의 실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상대국가의 언급, 의도 등의 잠재적인 것일 수도 있다. 딘 프루이트(Dean Pruitt)는 위협인식을 능력과 위협적 의도를 종합적으로 본 것이라고 보았는데, 싱어(J. David Singer)와 월트(Stephen M. Walt) 또한 위협 인식은 ‘물리적 능력’과 ‘심리적 의도’ 모두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³⁶⁾

따라서 본고에서도 북한의 외부위협의 인식의 수준이 실질적 군사·경제 제재와 같은 물리적 요소와 대북기조와 같은 심리적 요소 모두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북한이 외부위협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상황은 물리적으로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군사·경제 제재 조치가 존재함과 동시에 심리적으로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북기조가 존재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 놓일 경우 북한은 외부환경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이 외부 위협의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상황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실질적 군사·경제 조치에 직면하지 않고, 단순한 외교적 단절 등의 상황에 놓여있음과 동시에 심리적으로

36) 월트는 위협인식을 ‘총체적 권력’, ‘지리적 인접성’, ‘공격적 군사능력’ 등의 물리적 요소와 함께 ‘인지된 공격적 의도’와 같은 심리적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저비스는 행위자의 의도에 대해 더 적절한 정의를 내놓았는데 ‘국가들이 하려고 했거나 하려고 하는 행동들의 집합’이라고 정의 내림으로써 의도와 위협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의지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외부위협에 대한 정의는 외부위협이 단순히 물리적 능력이나 힘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Walt. Ibid., pp. 21-28.; Jervis, Ibid., pp. 48-54.



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조가 유화적인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북한은 외부위협 수준이 낮다고 인식함과 동시에 자신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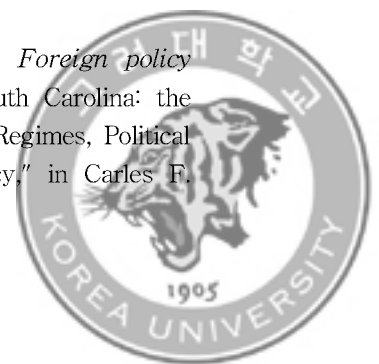
북한은 이처럼 국제사회의 실질적 제재 등의 물리적 요소와 대북기조의 심리적 요소에 의해서 ‘외부위협 수준’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 ‘외부 위협 인식’의 수준에 따라서 북한의 대남군사도발 선택의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2) 정권의 취약성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을 선택하는 또 다른 주요 변인은 ‘정권의 취약성’인데 본고에서는 북한 ‘정권의 취약성’이 높을수록 북한이 대남군사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³⁷⁾ 여기서 정권의 취약성은 “현재의 지도체제(leadership)가 정치적 집단(Political office)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한 문제로 현 정권이 또 다른 권력에 의해서 제거되거나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³⁸⁾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통치자와 통치를 받는

37) 정권(Regime)은 국가의 대다수 구성원들에게 합법적이고 권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치체제를 의미한다. 여기서 정권은 국가의 지도자로 대표될 수도 있고, 지배엘리트 계급으로 대표될 수도 있다. 단, 본고에서 정권은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그 지도자를 뒷받침하는 지배엘리트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David Easton, "An Approach to the Analysis of Political Systems," *World Politics*, (April, 1957), p. 392.

38) Jerel A. Rosati · Joe D. Hagan · Martin W. Sampson III, *Foreign policy Restructuring: How Governments Respond to Change* (South Carolina: th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1994), p. 156.; Joe D. Hagan "Regimes, Political Opposition,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Policy," in Charles F.



개인 또는 집단 간의 관계로서 정권이 지배엘리트들이나 군부, 반대 세력 등 다른 집단의 반대에 직면해 있고, 이 집단들이 현재의 지도 체계를 제거하는데 있어 위협적인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정권의 취약성’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정권의 권위가 이념적·실질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이며 두 번째는 정권에 대한 지배엘리트들이 결속되어 있는가의 문제이고, 세 번째는 일반 주민들을 포함한 사회가 정권에 대해 결속되어 있는가의 문제이다. 정권의 취약성을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요소는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우위를 갖지 않기 때문에 정권의 취약성을 구성하는데 있어 각각이 동등하게 중요한 요소로써 작용한다.³⁹⁾

본고에서 정의한 ‘정권의 취약성’의 구성요소를 북한에 적용시키면, 북한은 정권의 이념적·실질적 정통성이 부재하고, 당-정-군의 지배엘리트가 정권을 중심으로 분열되어 있으며,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경제상황 악화 등의 북한 내부분제로 인한 주민들의 분열로 정권에 대한 사회적 결속도가 낮을 때 정권의 취약성이 매우 높은 수준에 놓이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 정권이 이념적·실질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지배엘리트들이 정권에 결속되어 있으며,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국내 장애물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아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Hermann, Charles W. Kegley, Jr., and James N. Rosenau, (eds.),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Foreign Policy* (Boston: Allen and Unwin, 1987), p. 346.

39) 정권 취약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 간 우위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요소 간에 우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각각의 요소가 동등한 위치에서 정권의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결속도가 높을 경우 북한 정권의 취약성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게 된다. 이처럼 북한 정권의 취약성이 매우 낮은 수준에 놓이게 되면 북한정권은 상당히 안정된 수준으로 정권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북한 ‘정권의 취약성’은 정권의 이념적·실질적 정통성의 확보여부, 정권에 대한 지배엘리트들과 주민들의 결속도로 구성되는데, 북한의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정권의 취약성’수준에 따라서 북한의 대남군사도발 선택의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제 2절: 가 설

본 연구의 핵심주장은 북한이 국제체제수준의 변수인 ‘외부위협 수준’을 높다고 인식하고 국내정치적 변수인 ‘정권의 취약성’이 높을 때 대남 군사도발을 전략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북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정권의 생존이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모든 국가의 궁극적 목적이 자기보존 이듯이 북한에게도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권의 생존인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정권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외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권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며, 두 번째가 정권 내부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안정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권의 생존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수단이 부족한 북한에게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데 있어 대남 군사도발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된다.

먼저,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은 북한에게 위협적 국면을 전환하여 외부위협 수준을 완화하고 북한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강압전략이 된다. 북한은 정권의 취약성이 높은 상황에서 외부의 위협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 경우 정권의 생존이 위기에 있다고 느끼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북한에게 외부위협 수준을 완화하는 것은 정권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북한은 현재의 위협적인 상황을 타파하여 북한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정권의 생존을 벼랑 끝에 몰리게 하는 것보다는 군사적 도발과 같은 위험한 행동이라도 현재의 불리한 상황을 타파할 계기를 만드는 것이 나은 전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주변국들에게 먼저 외부위협 수준을 완화하지 않는다면, 군사적 행동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위협한 언급과 제한적 무력사용을 통해서 인지시킨다. 북한은 이러한 위험감수적인 언급과 행동들을 통해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을 극대화하고 주변국들에게 확전의 우려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주변국들이 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유도한다. 북한의 궁극적 목적은 외부위협 수준을 완화해 북한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북한은 외부위협에 강도 높게 대응을 하면서도 위협을 완화할 시엔 충분히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내비친다.

하지만 이와 같이 북한이 주변국들에게 대화할 의지를 비쳤는



데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이 대화국면을 형성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국면을 전환할 카드로 대남 군사도발을 선택한다. 이때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은 북한을 둘러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그 어떤 나라도 북한으로 인한 동북아의 불안정성의 확대를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효과적 강압전략이 된다.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은 주변국들을 전면전으로 돌입시키기에는 미약하지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주변국들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기에는 충분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변국들은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을 응징하고자 함에도 동북아에 큰 비용이 드는 대규모 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응징은 비난 성명의 수준에서 마무리 짓고, 협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대남 군사도발로 인한 긴장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남군사도발의 효과는 북한이 정확히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은 대남 군사도발 전략의 이와 같은 논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의 취약성이 높은 상황에서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경우, 현 상황을 타파하여 외부위협 수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자신들에 보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대남 군사도발을 선택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북한은 대남군사도발을 통해 동북아의 불안정성을 극대화하여 주변국들을 위기 해소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함으로써 북한에게 우호적인 국면을 조성하는 유일하고도 매우 효과적인 강압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정권의 취약성을 극복하여 정권의 안정적 생존을 담보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 전략이 된다. 첫 번째로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은 수령절대주의와 선군독재를 통한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국가목표를 내건 북한의



취약한 정권 정통성을 극복하는데 있어 효과적 전략이 된다. 북한과 같은 가산제적 독재국가에서는 지도자에 대한 정통성이 곧 정권의 정통성이 되는데, 지도자는 이념적 차원, 실질적 차원 모두에서 정통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은 ‘선군사상’의 이념적 차원을 실제로 지도자가 계승하고 실현한다는 것을 지배엘리트와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지도자가 이념적·실질적 차원의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는데 효과적 수단이 된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대남 군사도발을 통해 경제난과 같은 북한내부에 존재하는 문제를 희석시키거나 외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낼 계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문제와 연결된 실질적 정통성을 확보할 기회도 마련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의 군사도발은 북한의 지도자가 이념적 차원, 군사·경제 분야의 실질적 차원 모두에서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 된다.

둘째로 ‘외부의 적’에 대한 실질적 대응인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은 북한 내부적으로 지배엘리트들의 단결을 도모하고 정권에 이완되어 있거나 제거하기 어려운 지배 엘리트들을 제거할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정권의 취약성을 완화 하는데 효과적 전략이 된다. 북한에게 있어서 지배 엘리트의 결속은 중요한 문제인데, 지배엘리트들 간에 세력경쟁이 발생하고 정책에 대한 합의가 부재할 경우, 이것은 곧 북한 정권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 특히, 지배엘리트들의 정권에 대한 결속도의 문제는 지도자의 교체가 일어나는 시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이 시기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를 중심으로 신·구 엘리트간의 세력교체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할 경우 정권의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의 적’에 대한 직접적 대응인 대남군



사도발은 지배 엘리트들이 정권에 대해 분열된 모습을 보일 경우 내부의 분열을 종식시키는데 있어 효과적 수단이 된다. 북한은 대남 군사도발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라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일이라도 이들이 당장에 북한을 침략할 것처럼 내부의 긴장을 극대화함으로써 정권에 대한 지배엘리트들의 결속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상대적으로 위험감수적인 정책인 대남군사도발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정권에 이완되어 있거나 정권에 위협적인 엘리트들을 가려낼 계기를 마련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지배엘리트들의 분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정책인 군사도발을 통해 충성도가 높은 지배엘리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과 동시에 정권에 대해 이완되어 있거나 그동안 제거하기 어려웠던 지배엘리트들을 군사도발을 기제로 숙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은 현재 존재하는 엘리트들의 분열을 종결시키고 추후 존재할 수 있는 엘리트들의 분열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정권의 취약성을 완화하는데 있어 좋은 수단이 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은 경제난과 같은 북한 내부 문제로 인한 주민들과 사회의 불만을 외부위협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사회적 결속을 도모하는데 효과적 수단이 된다. 그 동안 북한주민들은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극도로 궁핍한 생활을 감내해야 해야 했는데, 이로 인한 주민들의 심리적 동요와 정권에 대한 이완현상은 북한 정권의 생존에 위협적 요소로 작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은 북한주민들의 시선을 북한 내부문제에서 외부위협으로 돌리게 만들고 동시에 대남·대미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사회적 일탈현상을 차단함으로써 정권에 대한 결속을 도모하는데 효



과적 수단이 된다. 즉, 대외적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비라는 명분하에 주민들을 통제하고 결속을 강화해 정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외부위협 수준’을 높다고 인식하고 ‘정권의 취약성’이 높으면 두 변수의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남군사도발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북한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정권의 생존을 담보하고자 한다. 이것은 높은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과 ‘정권취약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고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북한은 ‘외부위협 수준’을 높다고 인식하고, ‘정권의 취약성’의 수준 또한 높을 때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래의 <표 2>와 같이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하는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먼저, <표 2>의 (Cell 3)처럼 북한이 ‘외부위협 수준’을 낮다고 인식하고, ‘정권의 취약성’이 낮은 수준에 있어 북한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정권의 생존을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경우 북한은 위험감수적인 군사도발을 통해서 굳이 현재의 상황을 타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남 군사도발을 전략으로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와 더불어 (Cell 4)에서처럼 북한이 ‘외부위협 수준’을 높



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권의 취약성’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 북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정권의 생존이 안정적으로 담보되는 경우에도 북한은 대남 군사도발을 전략으로 선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외부위협 수준’은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과 반대로 (Cell 1)과 같이 ‘정권의 취약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외부상황이 매우 우호적이어서 북한이 외부로부터 정권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북한은 대남 군사도발을 수단으로 선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위험 감수적인 전략인 대남 군사도발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우호적인 주변국들로부터 경제난과 같은 북한 내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 변수의 수준에 따른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	
		낮 음	높 음
정권 취약성	높 음	(Cell 1) 도발 가능성 낮음	(Cell 2) 도발 가능성 매우 높음
	낮 음	(Cell 3) 도발 가능성 매우 낮음	(Cell 4) 도발 가능성 낮음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한 가설과 같이 북한은 높은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과 ‘정권의 취약성’이라는 두 개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북한 정권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제 3장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북한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포격침사건에 이어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를 향해 170여 발의 해안포와 곡사포, 방사포 공격을 감행했다.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남한의 대응사격이 이뤄졌으나, 북한의 군사 도발로 남한 측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고, 20여명의 군인과 민간인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연평도 포격도발은 북한 정규군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영토에 직접적 공격을 감행했다는 점, 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민간인을 위협하여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수준의 도발이었다. 그렇다면 북한은 천안함포격침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8개월 만에 왜 이처럼 강도 높은 군사도발을 감행했는가? 북한의 군사도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가?

본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사실은 천안함포격침사건 이후 한국과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제제조치와 계속되는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 중국의 불안정한 대북기조로 인해서 북한이 ‘외부위협 수준’을 매우 높다고 인식함과 동시에 북한 내부 ‘정권의 취약성’ 또한 매우 높았기 때문에 북한이 두 변수의 수준을 완화하여 정권의 생존을 도모하고자 군사도발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북한은 ‘외부위협 수준’을 높다고 인식하고, ‘정권의 취약성’이 높은 수준에 놓일 경우 정권의 생존이 위기 놓였다고 인식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은 높은 외부위협수준을 완화하고 정권의 취약성을 낮추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먼저, 천안함포격침사건 이후부터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나기 전 북한의 ‘외부위협 수준’



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분석함과 동시에 북한이 외부위협 수준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군사도발을 선택하게 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국제체제수준의 변수인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태도 및 정책과 같은 ‘외부위협 수준’을 북한이 어떻게 인식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대남 군사도발이라는 전략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국내정치적 수준의 변수인 ‘정권의 취약성’의 수준이 북한의 대남군사도발 전략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권의 취약성’은 정권의 이념적·실질적 정통성여부, 정권에 대한 지배엘리트들의 결속도, 정권에 대한 사회의 결속도로 구성되는데 연평도 포격이 발생할 당시 북한정권의 취약성을 구성하는 이 세 변수의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취약성’이 전반적으로 어떠한 수준에 있었는지 살펴봄과 동시에 북한의 대남군사도발 전략 선택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것이다.

제 1절 도발의 원인: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높은 인식

1)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높은 인식

연평도포격이 이루어지던 시기 북한의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다. 먼저, 천안함포격침사건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로 북한의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다. 북한은 이미 2009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 2차 핵실험으로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에 의



해서 제재를 받고 있었는데, 북한에 대한 원조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함포격침사건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조치는 북한에게 있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협이었다. 북한은 이에 천안함포격침사건을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소행임을 부인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잇따른 추가제재 조치를 실시했다.⁴⁰⁾ 한국은 포괄적 대북제재 조치인 ‘5. 24 대북 제재조치’를 발표했고, 캐나다는 대북 수출입을 금지하는 대북제재에 착수했으며, 일본의회는 북한에 드나드는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⁴¹⁾ 오바마 정부의 등장과 함께 유화적 정책으로 전환을 기대했던 미국 또한 한국의 남북경협 중단조치와 보조를 맞춰 8월 대북 추가제재 조치를 실시했다.⁴²⁾ 이미 연간 1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던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이어지는 추가 제재조치는 북한에게 매우 위협적인 것이었다.

이에 북한은 최고 국방지도기관이자 실질적으로 김정일의 직속 기관인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그 어떤 응징과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우리의 국가적 이익을 침해하는 그 무슨 제재에 대해서도 그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이라며 현재의 상황에 대한 위협의식을 드러냈다.⁴³⁾ 특히 남한의 5. 24 대

40) 『조선중앙통신』, 2010. 5. 20

41) 5. 24조치는 남북관계차원에서 북한 선박의 남측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하고 남·북간에 일반·위탁가공교역을 전면 중단하며 대북 신규 투자 및 투자확대를 금지함과 동시에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측주민 접촉제한, 인도적 지원 외의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5개의 제재 조치를 담고 있다.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검색일: 2010.4.28.)

42) 미국의 제재조치는 금융제재를 골자로 하는 것이며 이미 시행 중인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대량살상무기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133382호를 포괄·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BBC, 30 August 2010.

43) 『조선중앙통신』, 2010. 5. 20.; 『조선중앙방송』, 2010. 5. 20 - 5. 21.; 『연합



북 제재조치에 대해 북한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남한의 대북조치에 대한 총 8개의 행동조치를 발표함과 동시에 “전면적 군사적 타격 행동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이와 더불어 평양에서는 10만 여명의 북한 주민이 모여 “미제와 이명박 패당의 반공화국 대결 모략책동을 폭로 규탄”하는 군중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이례적이고 강도 높은 반응들은 북한이 ‘외부 위협의 수준’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증거 하는 것이었다.⁴⁴⁾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조치와 더불어 한국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실제적·물리적 대응 훈련인 합동군사훈련 또한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한층 강화시키는 요소였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은 유엔안보리가 의장성명을 발표한지 2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졌는데, 이 합동군사훈련은 1976년 북한의 도끼 만행 사건 이후 최대 규모로 치러진 군사훈련으로 직접적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⁴⁵⁾ 이와 동시에 서해에서는 나흘간 한국의 독자적 대잠훈련과 유사시 한반도 안전보장과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의 을지프리덤가디언(Ulchi-Freedom Guardian)훈련이 실시되었다. 특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서는 직접적으로 북한의 남침을 대상으로 한 워 게임(War Game)이 이뤄졌는데, 이처럼 북한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은 내부적으로 ‘선군정

뉴스』, 2010. 5. 26.

44) 『조선중앙통신』, 2010. 5. 27.; 『조선중앙방송』, 2010. 5. 30.

45) 이 연합훈련에는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USS George Washington)와 한국의 독도함 등 20여 척의 함정과 최신예 F-22전투기를 비롯한 양국의 전투기 200여대, 병력 8000여명이 참가하였다. 『한국일보』, 2010. 7. 28.



치'를 내걸고 불안정한 후계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에게는 감내하기 어려운 위협적 요소였다. 이에 북한은 한국의 서해 해상훈련이 시작되기 이전 조선인민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 통고문을 통해서 서해훈련을 '노골적인 군사적 침공행위'로 여기고 이에 대해 '강력한 물리적 대응타격으로 진압할 데 대한 단호한 결심'을 채택하였다는 내용을 통지함과 동시에 "우리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라며 위협의 강도를 높였다.⁴⁶⁾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도 한·미의 해상 군사훈련이 계속되자 북한은 "한·미 해상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 등 힘으로 우리(북한)를 압살하려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침략전쟁 도발책동으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최악의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서해안에 130발의 해안포를 직접 발사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 감수적 발언과 행동들은 오히려 북한의 높은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을 반증하는 것이었다.⁴⁷⁾

한·미의 계속되는 군사훈련과 더불어 중국의 불안정한 대북 기조는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한층 고조시키는 요인이었다. 북한에 대항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중국이 유일했지만, 2009년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기조는 냉랭했다. 이에 북한은 2010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의 지원과 지지를 이끌어 내고자 했지만, 중국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을 얻어 낼 수 없었다.⁴⁸⁾ 이미 2009년 10월과 11월 싱가포르와 개성에서 한국과 두 차례 비밀회동

46) 『조선중앙통신』, 2010. 8. 3; 『로동신문』, 2010. 8.7.

47) 『연합뉴스』, 2010. 8. 26; 『로동신문』, 2010. 8. 11. - 8. 25.

48) 『연합뉴스』, 2010. 5. 8.



을 통해 협의한 북한에 대한 식량 30만 톤 지원이 수포로 돌아가고,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강화되는 속에서 중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북한 정권의 생존에 매우 위협적 요소였다.⁴⁹⁾

이처럼 외부위협 수준이 북한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자,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정권의 생존이 위기에 놓여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외부위협수준’을 완화하는 것이 곧 북한정권의 생존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 되자 북한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이끌어 내고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내어 ‘외부위협 수준’을 완화 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북한은 ‘대화와 협력’, ‘다자안보체제와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문제해결’이라는 외교안보기조를 가지고 있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고자 했다.⁵⁰⁾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를 통한 압박에도 ‘전략적 인내’와 ‘의도적 무관심’전략을 취하며 이명박 정부와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었는데, 북한은 이러한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자 했다.⁵¹⁾ 먼저, 북한은 ‘평화협정’체결을 빌미로 미국과의 대화·

49) 『매일경제』, 2010. 4. 1.

50) 북한은 부시정부와 달리 ‘대화와 협력’을 통한 국제문제해결이라는 외교안보기조를 가지고 있는 오바마 정부의 등장과 함께 강경한 대북정책의 전환이 이뤄질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북한의 기대와 달리 오바마 정부는 한국과의 단단한 공조아래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준을 높여나갔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북한에게 상당히 당혹스러운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외부위협수준’에 대한 인식은 높은 수준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The Korea times*, 22 Jan 2009. ; Blaine Harden, "With Obama in White House, North Korea Steps Up Big Talk," *The Washington Post* (4 February 2009); Dong Sun Lee, *ibid.*, pp.108-111.

51) 정규섭, “김정일 정권의 천안함 도발 동기 분석,” 『국방연구』, 제 53권, 제 3



협상의 테이블을 형성하고자 했다. 북한은 2010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근본문제는 ‘조·미 사이의 적대 관계 종식’이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북한의 입장은 일관되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테이블 형성을 유도했다.⁵²⁾ 천안함 폭침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의장성명 직후에는 ‘6자회담 복귀’와 ‘평화체제’ 논의의 언급함으로써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지금까지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책임 또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있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이 가지고 있는 더욱 강력한 수단인 ‘한반도의 비핵화’문제를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자 하였다.⁵³⁾ 하지만 미국의 커트캠벨 국무부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은 올바른 환경 하에서 북한과 마주 앉아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원치 않는다”면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의무 수용을 사실상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내세웠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 없는 대화테이블 형성이나 대북정책 변화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⁵⁴⁾

북한은 미국의 정책전환과 더불어 남한의 대북정책 또한 전환하여 남한으로부터 지원을 얻어내고자 했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남한의 조건 없는 지원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는데, 이에 북한은 2010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그 어느 해보다 강력한 어조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 4 선언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증진을 강조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대북

호(2010), p.133; 조재욱, 앞의 글, p.14.

52) 『로동신문』, 2010.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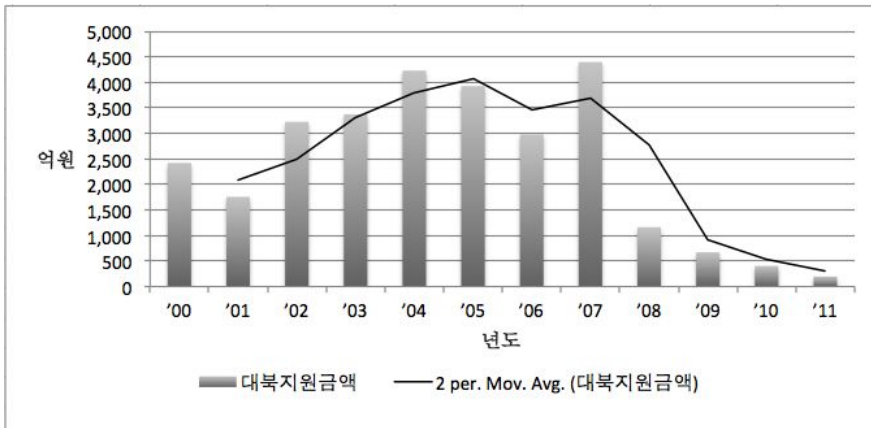
53) 『로동신문』, 2010. 10. 28.

54) 『연합뉴스』, 2010. 7. 20.



정책전환을 유도하고 ‘조건 없는 대북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했다.⁵⁵⁾

<표 3> 남한의 인도적 대북지원(민간지원 및 식량차관 포함)



*출처: 통일부 (검색일: 2012. 4. 30)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241>

먼저, 남한이 상대적으로 수용하기 쉬운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수해지원을 제안함으로써 남한의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했다.⁵⁶⁾ 북한의 제안에 남한은 쌀 5,000톤과 시멘트 1만 톤 등 총 100억 원 규모의 구호물자를 전달하였는데, 북한의 식량 부족분 100만 톤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북한은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남북회담을 수차례 요구함으로써 남한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했지만, 이 또한 이명박 정부의 ‘진상규명, 신변보장, 재발방지’라는 3대 전제조건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북한의 대화제스처에 ‘북한의 유의미한 태도변화 없

55)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는 어느 해 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로동신문』, 2010. 1. 1.; 통일부 정세 분석국, “북한의 2011년 신년공동사설 분석,” 『통일부』, (2011).

56) 『아시아투데이』, 2010. 9. 11.



는 대북정책 전환은 없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했다.⁵⁷⁾

이처럼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자 북한은 유일한 북한 지지국인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 북한은 서해에 한국과 미국의 해군이 출몰하는 상황을 매우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의 우려를 이용해 대북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천안함폭침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5월, 4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⁵⁸⁾ 북한은 천안함폭침사건으로 서해에서 한국과 미국의 연합 군사훈련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중국이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서해에서 전쟁이 다시 발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대북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한 것이다.⁵⁹⁾ 하지만 중국은 '개혁·개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북한의 경제정책의 변화를 촉구할 뿐 북한이 바라던 무상경제지원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았다.⁶⁰⁾ 이와 더불어 북한은 중국이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이 또한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을 수 없었다.⁶¹⁾ 이에 북한은 8월 다시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했지만, 역시나 중국의 반응은 적극적이지 않았다.⁶²⁾ 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의 공세가

57) 『한국경제』, 2010. 9. 28.

58) Han Sung Joo, "The Yeonpyong Shelling: North Korean Calculations," *The Trilateral Commission 11th Pacific Asian Regional Meeting*, (December 2010), Tokyo, pp. 2-3.

59) Han Sung Joo, Ibid., p.2-3.

60) 신상진, "중국의 대북정책과 6자회담," 『북한경제리뷰』, (2011), pp. 44-45.

61) 박형중, "김정일의 중국방문의 두 가지 의도: 전술적 국면 전환과 2012년 전략적 기반조성,"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2011), pp. 11-16.

62)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정부 주도로 중국기업의 북한진출 확대'를 약속하였지만 북한처럼 리스크가 큰 지역에서 중국의 대북투자는 소규모에 그칠 수밖에 없었으며 무상경제지원에 대한 확답도 얻을 수 없었다. 신상진, 앞의 글, pp.



강화되는 속에서 중국의 지원과 지지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2) 외부위협 완화 수단으로써 연평도 포격

이처럼 다양한 방법과 통로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이끌어내고 중국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북한의 노력은 모두 실패로 귀결되었다. 이에 북한의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은 최고조의 상황에 놓였고, 북한은 현재의 위협적인 상황을 흔들며 국면을 전환 할 수 있는 고강도의 강압전략으로 연평도 포격을 선택했다. 그 동안의 노력을 통해 한국, 미국, 중국의 관계에서 더 이상 손해 볼 것이 없다고 판단한 북한은 연평도포격이라는 고강도 위기조성 전략을 통해 한국, 미국, 중국에게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국면을 전환하고 최고조의 수준에 놓여 있는 ‘외부위협 수준’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1)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 전환 유도

무엇보다 북한은 연평도포격을 통해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을 전환하고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대화테이블을 형성하여 외부위협 수준을 완화하고자 했다. 북한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연평도포격을 감행했다는 것은 세 가지 측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연평도포격이 발생하기 며칠 전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



설을 핵 전문가 해커교수(Siegfried Hecker)에게 공개함과 동시에 ‘미국의 제재철회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는 것을 통해 연평도포격을 미국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⁶³⁾ 북한은 연평도포격사건 직전 미국의 오랜 우려사항인 우라늄 농축문제를 자극하여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자 우라늄 시설을 공개함과 동시에 “미국이 조선(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길을 택한다면 두 통로의 다른 한쪽(우라늄 농축)인 핵 억제력 강화 노선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조선을 떠밀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자 했다.⁶⁴⁾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압박에 대해 미국의 보즈워즈(Stephen Warren Bosworth)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또 하나의 중대한 도발 행위지만 이것이 위기는 아니다. 몇 년 동안 주시했기 때문에 이일로 놀라지 않는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북한은 고강도강압전략인 연평도포격을 수단으로 내세워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강제하고자 했다.⁶⁵⁾

두 번째로 북한이 연평도포격 직후 ‘대화 테이블 형성’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 한 것을 통해서도 연평도포격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환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은 먼저 “신뢰조성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는 제안에 미국이 호응하지 않아 연평도 포격이 발생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연평도포격사건이 북한과

63) *The Economist*, 24 November 2010; Peter M. Beck, "North Korea in 2010," *Asian Survey*, Vol 51. No. 1 (January/ February 2011). pp. 35.

64) 『조선신보』, 2010. 11. 18.

65) 북한의 고위관리들이 우라늄 농축공장을 해커 소장에게 보여주면서 2000년 북미 공동 코미니케(US-DPRK Joint Communiqué)를 언급했는데, 이것은 북한이 현재 비핵화보다는 북·미관계 개선이 더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일보』, 2010. 11. 21. 『경향신문』, 2010. 11. 22-23.



대화에 응하지 않은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강조했다.⁶⁶⁾ 이와 동시에 연평도포격사건을 계기로 형성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고 북한의 “2차, 3차의 강력한 대응타격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북·중·미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협상의 틀을 마련하고 임시적 방편이 아닌 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 타협점을 찾는 것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미국에게 북한과 대화의 틀을 마련한 것을 촉구하였다. 이처럼 북한이 연평도포격사건의 원인이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에 있음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지금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대화의 재개’를 제시한 것은 연평도포격을 통해 미국을 북한과의 대화테이블로 유도하고자 한 북한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었다.⁶⁷⁾

세 번째로 연평도포격사건 이후 미국이 연평도포격을 감행하기 전 북한이 계속해서 요구했던 방향으로 실제 강경한 대북정책을 일정 정도 선회했다는 것을 통해서도 북한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은 연평도포격사건 이후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자 과거 강경한 원칙을 견지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정책의 선회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의 선회는 연평도포격사건 직후 개최된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뤄졌는데, 미국은 이 자리에서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남북한이 성실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첫걸음’이며 ‘조기에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합의하였다. 중국과 미국의 이러한 합의는 연평도포격

66) 『조선중앙통신』, 2010. 11. 25; 『조선신보』, 2010. 11. 27; 『조선신보』, 2010. 12. 4.

67) 『조선신보』, 2010. 12. 4; 『조선중앙통신』, 2010. 12.9; 『조선신보』, 2010. 12. 7; 『조선중앙통신』, 2010. 12.11.



사건 이전부터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대화노선’을 미국이 수용한 것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연평도포격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환하고자 한 북한의 의도가 현실화 된 것이었다.⁶⁸⁾

(2) 남한의 적대적 대북정책 전환 유도

이와 더불어 북한은 연평도포격을 통해 남한의 대북정책도 전환하여 ‘외부위협 수준’을 완화하고자 했다. 북한의 이러한 의도는 세 가지 측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연평도포격사건 전후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강조한 북한의 언급을 통해서 북한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은 먼저 연평도포격사건 직후 “이명박 정부가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고 ‘비핵개방 3000’이라는 대북정책을 실시하여 연평도포격이 발생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연평도포격사건이 남한의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강조했다.⁶⁹⁾ 이와 더불어 북한은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여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운동을 벌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연평도 사태들이 발생할 것”이며 “지금의 첨예한 정세를 타개할 유일한 출로 또한 이 두 선언을 이행하는 것”이라 주장함으로써 남한의 정책전환을 압박하였다.⁷⁰⁾ 이처럼 연평도포격 전후로 두 선언의 이행을 강조한

68) The White House, “U.S. - China Joint Statement,” (January 19, 201),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1/01/19/us-china-joint-statement/r> (검색일: 2012. 6. 10); 『한국일보』, 2011. 1. 19.

69) 『조선신보』, 2012. 11. 22.; 『조선중앙통신』, 2010. 11. 26; 『조선신보』, 2010. 12. 7.

70) 『조선신보』, 2010. 12. 9.



북한의 태도는 연평도포격을 수단으로 남한정부에 두 선언의 이행을 압박함으로써 남한의 대북정책을 전화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⁷¹⁾

두 번째로 연평도포격사건 이후 강화된 남한에 대한 북한의 대화공세 또한 연평도포격사건을 남한의 대북정책 전환에 이용하고자 한 북한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대화공세는 연평도포격사건 직후인 2011년 신년공동사설로 시작되었다. 북한은 2011년 1월 5일 로동신문을 통해 “북·남 대결상태의 해소는 현실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논설을 게재하고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남·북 당국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남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다.⁷²⁾ 북한의 이와 같은 대화 요구에 대해 한국정부는 천안함포격사건, 연평도포격사건, 비핵화 등이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거리를 두었는데, 이에 북한은 남한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남한의 요구를 수용하여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사건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데 대하여”라는 명목으로 남한에 군사회담을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다.⁷³⁾ 연평도포격사건 직후 남한에 대한 북한의 이와 같은 절실한 대화요구는 연평도포격

71) 『조선중앙통신』, 2010. 12. 9.

72) 『로동신문』, 2011. 1. 1. -12.

73) 2011년에 들어서 북한의 대화 제의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1월 8일에는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당국사이의 무조건 회담을 요구하면서 “진의를 의심할 것도 없다”고 하였다. 의제로서 적십자 회담, 금강산관광재개회담, 공업지구회담을 개성에서 1월말 또는 2월초 개최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1월 10일에는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적십자사중앙위원회, 남북경협협회사무소 북측소장 명의로 남북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남북적십자회담,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회사무소 재개를 요구하면서 관문점 남북적십자채널을 복원할 것임을 알리는 통지문을 보내오기도 했다. 『로동신문』, 2011. 1. 8 -10.



사건을 통해 형성된 남·북간의 긴장을 이용하여 남한과 대화의 테이블을 형성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양국이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직후 군사회담을 제안한 북한의 행태는 연평도포격사건을 계기로 형성된 주변국들의 한반도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역이용하여 남한의 대북정책을 전환하고자한 북한의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세 번째로 연평도포격사건 이후 이뤄진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의 선회를 통해서도 연평도포격사건을 감행한 북한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평도포격사건 직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남한에 대화개개를 요구하고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우려하면서 ‘남북대화 중요성 강조’하자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대화재개 요구를 승낙함과 동시에 연평도포격사건 전까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던 ‘천안함폭침이나 연평도포격사건에 대한 사죄와 재발방지 표명’을 ‘직접적인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는다’고 공언함으로써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선 태도를 취하였다.⁷⁴⁾ 이와 같은 남한의 태도변화는 연평도포격사건으로 한반도에 형성된 불안정성을 극대화하여 남한의 대북정책을 전환하고자한 북한의 의도가 성취된 것이었다.

(3) 중국의 적극적 북한 지원 유도

북한은 남한과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환하는 것과 더불어 연평도포격사건이라는 일탈행위를 통해 중국의 우려를 현실화하고 중국

74) 『동아일보』, 2011. 1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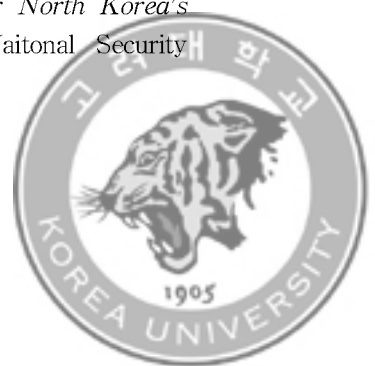
과 한·미·일의 대립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중국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⁷⁵⁾ 무엇보다 북한의 이러한 의도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중국의 불안정한 지지에 불만을 표출하고 중국의 우려를 이용하고자한 북한의 태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북한은 먼저, 중국에서 광저우게임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연평도포격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중국의 불안정한 지지에 불만을 표출하고 중국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낼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⁷⁶⁾ 이와 더불어 연평도포격을 통해 서해에 한국과 미국의 해군을 불러드려 중국이 매우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을 현실화함으로써 중국이 직접 한국과 미국에 대립각을 세우고 북한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북한의 이러한 의도는 중국이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대응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현실화되었다. 중국은 핵 함모까지 동원하여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한·미 양국에게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군사행동을 중단해야한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대응차원에서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변화를 통해 연평도포격을 수단으로 주변국들과 중국과의 대립각을 형성하여 중국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했던 북한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⁷⁷⁾

두 번째로 북한의 연평도포격사건으로 동북아 전체에 불안정

75) 한승주, 앞의 글, pp. 2-5; Changhee Park, · Dongwon Yoo · Yinhong Shi, *Measures for ROK-Chinese strategic cooperation to deter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 (서울: The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011).

76) 『연합뉴스』, 2010. 11. 23.

77) 『중앙일보』, 2010. 12. 21.



성이 높아지자 중국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미국의 강경한 대북정책 선회를 이끌어 낸 것을 통해서도 연평도포격을 통해서 중국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한 북한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이 직접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후진타오 주석의 집권 이래 최초로 이뤄진 것이었는데, 여기서 주요의제가 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의 문제였다. 이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 없는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미국으로부터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기재개’와 ‘남북대화의 중요성 강조’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수준의 ‘우라늄관련 성명’을 채택하려는 미국을 저지하여 낮은 수준의 우려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⁷⁸⁾ 이와 같은 미국의 누그러진 태도는 북한이 연평도포격사건 전후로 끊임없이 미국에 요구해 온 사항을 중국의 적극적인 북한 지원행보로 현실화 된 것이었다. 이처럼 북한은 연평도포격사건을 통해 형성된 동북아의 불안정성을 활용하여 중국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 냈고 동시에 중국을 통해 한국과 미국에 그동안 요구해온 사항을 확보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연평도포격사건 직후 중국이 우회적으로 북한의 후계계승과정에 대한 인정을 표명한 것을 통해서도 연평도포격사건을 감행한 북한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⁷⁹⁾ 연평도포격사건이 발생한

78) 북핵 9.19 공동성명과 UN 안보리 대북결의안 위반이라는 사실을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중국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 표현수위를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로 낮추어서 중국의 동의를 이끌어 내었다. 『한국일보』, 2011. 1. 19.; The White House, Ibid.

79) 조민, “김정일 위원장의 ‘비즈니스 투어’ 평가,”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제 11권, 제 17호; 조재욱, 앞의 글, p.73.



직후인 2011년 5월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이뤄졌는데, 김정일은 본 정상회담에서 “조·중 친선 협조관계를 대를 이어 계승하고 우호의 바통을 한 세대, 한 세대로 이어 내려가야 한다”면서 중국으로부터 김정은 3대 세습에 대한 승인을 얻어내고자 했다. 이에 후진타오 중국주석은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전통적인 조·중 친선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데서 역사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북한의 세습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⁸⁰⁾ 중국의 대답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북한은 연평도포격을 수단으로 중국으로부터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인정을 받아 낼 수 있었다

제 2절 도발의 원인: 높은 정권의 취약성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한·미의 군사훈련, 중국의 불안정한 대북기조로 ‘외부위협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고 인식하자 연평도포격을 일종의 강압수단으로 이용하여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전환과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어 ‘외부위협의 수준’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제체제수준의 변수인 ‘높은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만으로 북한의 연평도포격사건을 설명하기에는 외부위협의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는데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원인의 동학에 대한 풍부한 설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내부정치 수준의 변수인 ‘정권의 취약성’을 살펴본다.

80) 『조선중앙통신』, 2011. 5. 6.; 『연합뉴스』 2011. 5. 26.



1) 높은 정권의 취약성

북한 정권은 정권의 이념적·실질적 정통성이 취약하고, 정권에 대해 지배엘리트와 주민들이 분열되어있을 때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연평도 포격이 발생하기 전 북한 정권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특히, 2008년 8월 김정일의 건강악화로 갑작스럽게 시작된 김정일의 셋째 아들 김정은으로의 후계계승과정은 북한 정권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 취약한 이념적·실질적 정통성

첫 번째로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한 김정은의 취약한 이념적·실질적 정통성은 북한 정권의 취약성을 상당히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⁸¹⁾ 북한과 같은 가산제적 독재국가에서는 지도자의 정통성이 곧 정권의 정통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권의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확고한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갑자기 세력계승과정을 밟게 된 후계자 김정은에게는 아버지 김정일이 1972년 12월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약 14

81) 김정은은 존재적 정통성의 측면에서 북한에서 차별과 제한을 받는 대상인 남한 출신이자 일본인인 고영희의 아들이라는 출신성분에 한계도 존재했다. '혈통'과 '출신성분'에 집착하는 북한에게 이는 위험한 문제였다. 북한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맞는 첫 생일날(1.8) 김정은의 세습 정통성을 강조한 기록영화를 반영하고 김정은과 김일성의 모습을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고자 했지만 존재적 정통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히라이 하사시, 『김정은 체제 : 북한의 권력구조와 후계』 (과주 : 한울아카데미, 2012), pp. 300-301 ; 『Daily NK』, 2011. 1. 10.



년에 가까운 시간을 후계계승사업에 투자하여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한 것과 달리 후계자로써의 정통성을 확보할 조건도 시간도 주워지지 않았다.⁸²⁾ 특히, 김정일 정권이 선포한 ‘강성대국’건설을 ‘사상에 의거’하고 ‘선군에 의거’하며 ‘경제전선의 구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증명함으로써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는 김정은에게는 이를 실제로 책임지고 계승할 수 있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업적도 존재하지 않았다.⁸³⁾

무엇보다 김정은에게는 북한의 국가사상인 ‘선군사상’을 계승할 수 있다는 이념적 정통성을 증명할 수 있는 업적이 부재했다. 아버지 김정일은 1998년 들어서 김일성에 의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이론’을 김정일 시대에 맞게 새롭게 각색하여 ‘선군사상’을 핵심으로 한 ‘강성대국건설’을 완성함으로써 이념적 정통성을 확보하였지만, 28살의 어린 후계자 김정은에게 이런 업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⁸⁴⁾ 2009년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선군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규정하고 당의 당면목표를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라고 수정하여 김정은 체제에서도 ‘선군사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명문화하였지만 실제 김정은 자신이 이를 계승할 이념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⁸⁵⁾

82)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07), pp.118-125.

83) 북한은 1998년 들어서 ‘강성대국 건설’을 새로운 국가목표로 내세웠으며 2008년 로동신문을 통해 2012년에 강성대국의 포문을 열 것을 선포하였다. 여기서 강성대국이라는 것은 사상적인 단합을 이룩하여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군사 기술적으로 현대화되고 군민이 일치하여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를 의미한다. 김봉호, 『선군으로 위력 떨치는 강국 평양』 (평양: 평양출판사, 2005), p. 80; 『로동신문』, 2008. 1. 1.; 오성길, 『사회주의에 대한 주체적 이해』 (평양: 평양출판사, 2006), p. 239.

84) 현성일, 앞의 책, pp. 285-290.



이념적 정통성의 부재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선군사상’을 핵심으로 ‘강성대국’을 열수 있다는 능력을 의미하는 군사적 문제와 관련된 실질적 정통의 부재였다. 군사적 차원의 실질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군사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군사적 업적과, 강성대국의 포문을 여는데 기반이 되는 경제적 업적이 요구되었는데, 김정은은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이 없었다. 북한은 이처럼 부족한 군사적 차원의 실질적 정통성을 김정은에게 확보해 주기 위해 당대표자회의를 전후로 김정은에게 ‘대장’칭호를 수여하고 ‘당 중앙위원’이자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줬지만, 이를 뒷받침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실제적인 명분이 없었다.⁸⁶⁾ 마이니치신문이 공개한 ‘김정은 대장동지의 위대성 교양자료’에서 밝힌 ‘김정은이 선군영장이며, 군사적 영재이자, 현대군사과학과 기술에 정통한 천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업적 또한 김정은이 김정일군사종합대학시절 포병지휘관에 이어 연구원까지 5년 과정을 최우등으로 졸업했다는 것이 유일했다.⁸⁷⁾

김정은은 ‘인민생활개선’이라는 경제적 차원의 실질적 정통성을 확보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선군시대

85) 마이니치신문이 공개한 ‘김정은 대장 동지의 위대성 교양자료’에 의하면 김정은은 ① 불세출의 위인이며 백전백승의 강철과 같은 영장으로서의 수령님이나 경애하는 장군님과 비슷한 선군영장 ②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천재적 영지와 지력을 갖춘 군사적인 영재 ③ 다재다능하며 현대 군사과학과 기술에 정통한 천재 ④ 비범하고 다방면의 실력과 자애로 가득한 친근한 분위기를 갖춘 뛰어난 위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실제 이를 증명할 업적이 부재하다. 『연합뉴스』, 2011. 12. 19.

86) 김연수, “김정은 승계체제 권력구조의 특징,” 『안보현안분석』 제 53권 (2010), pp 2-3.; 『조선중앙방송』, 2010. 9. 29.

87) 『연합뉴스』, 2011.11. 19.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문제를 어떻게 결합시켜 풀어나가는가”하는 문제였는데, 김정은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경제적 정통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김정은이 경제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모든 경제정책은 실패로 귀결되었다. 김정은의 지시 하에 실시된 노력동원 전투인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가 성과를 내지 못했고, 2009년 김정은의 업적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전격적으로 실시된 화폐개혁 또한 참담한 실패로 돌아갔다.⁸⁸⁾ 천안함폭침사건으로 인해 외부로부터 지원이나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길도 모두 막혀버린 상황에서 김정은의 경제적차원의 실질적 정통성을 마련해주기 위해 무리하게 단행되었던 모든 조치들이 참담한 실패로 귀결되자, 결국 ‘어린 후계자 김정은’의 실질적 정통성은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2) 정권에 대한 지배엘리트의 낮은 결속도

두 번째로 북한 정권의 취약성을 높인 요인은 북한의 지배엘리트들이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해 결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북한에서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라’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현재 지도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기 때문에 지도자를 보좌하는 당·정·군의 지배엘리트를 정권에 이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김정일은 일찍이 지배엘리트들을 장악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1972년

88) 북한 당국의 주장에 의하면 150일 전투의 경우 공업생산에 있어 110%정도의 목표달성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나,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하는 민간 대북소식통들에 의하면 목표치에 크게 미달된 70%이하 수준의 성과에 그쳤다. 『열린북한방송』, 2009. 10. 12.



당중앙위원회에서 후계자로 내정되자마자 당의 지배엘리트들 시작으로 군부엘리트들 ‘장악’하고 포상과 숙청을 통해서 지배엘리트들을 철저히 자신에게 결속시켜 왔다.⁸⁹⁾ 하지만 김정일의 건강악화로 갑자기 후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 김정은에게는 당·정·군의 지배엘리트들을 순차적으로 장악하여 자신에게 결속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워지지 않았다. 특히, ‘선군사상’을 수단으로 강성대국의 문을 열고자 하는 북한정권에서 군부지배엘리트를 정권에 결속시키는 것은 안정적 후계체제 구축에 매우 중요한 문제였는데, 김정은은 이러한 북한의 군부를 장악할 명분도 업적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북한은 1955년 이래 44년 만에 개최되는 당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을 인민군 대장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지배엘리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김정일 유고시에 김정은이 권력승계 1순위가 됨으로써 당장 군사력을 장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⁹⁰⁾ 이와 더불어 김정은의 믿을 만한 후견인으로 여겨지는 김경희와 장성택을 군과 당 핵심요직에 선출하고, 군부에서 김정은을 도울 새로운 인물로 지배 엘리트 중 유일하게 60대인 ‘신군부’ 리영호를 임명했다. 김정일은 김정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김정일의 측근들과 새로운 세력들을 주요 요직에 기용함으로써 김정은에 대한 지배엘리트들의 결속도를 높이고자

89) 김정일은 후계자에 내정되자 마자 곧바로 당 조직체계와 당 생활지도체계, 간부사업체계, 지도검열체계 선전선동사업체계 등 전반적인 당 사업체계와 당기구체계의 개편과 정비를 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 주체 사상화 방침’을 관철하고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통해 군권을 장악하였다. 현성일, 앞의 책, pp. 100-125.

90) 문순보, 앞의 글, p. 219.



한 것이다.

하지만 지배엘리트들을 철저히 ‘장악’하여 정권에 대한 지배엘리트들의 결속도를 높인 김정일과 달리 김정일에 의해 그저 ‘임명’된 어린 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지배엘리트들의 결속도는 낮은 수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고위층 내부에서는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김정은의 자질이 의심의 대상이 되었고, 김정은이 더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군부노장세력과 빨리 권력을 인계 받아야 한다는 소장파사이의 의견차이로 치열한 논쟁이 이뤄지기도 했다.⁹¹⁾ 김정은의 후계체제와 인사문제에 대한 이와 같은 내부 논쟁으로 당대표자회의가 연기되기도 하였다.⁹²⁾ 북한의 후계자에서 밀려나 마카오와 베이징 등에서 체류하고 있는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은 ‘북한의 3대 세습’에 반대하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힘과 동시에 김정은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북한의 최고 지배엘리트인 김정남의 이러한 발언은 김정은과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한 북한 내부 지배엘리트들의 반발여론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⁹³⁾

(3) 정권에 대한 사회의 낮은 결속도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북한정권과 새로운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북한정권의 취약성을 더

91) 박형중, “2010년도 김정은 동향과 정치적 함의,”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2011), pp. 2-8.

92) 히라이 하사시, 앞의 책, p.35.

93) 고미 요지 지음. 이용택 역, 『안녕하세요 김정남입니다 : 방탕아인가, 은둔의 황태자인가? 김정남 육성 고백』 (서울 : 중앙M&B, 2012), pp.20-23.; 『Daily NK』, 2010. 10. 12.



욱 심화시켰다. 북한 경제는 고난의 행군 이래로 만성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2008년 이후 남한과 미국의 정권교체로 대북지원의 규모가 축소되고 북한의 위협감수적 행동들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새로운 후계자 김정은은 최악의 경제난을 극복하여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하고 내부결속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경제조치들을 실시하였지만 결국 모두 실패로 귀결되었다. 2009년도 강제적 주민동원방식의 증산운동인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는 성과를 내지 못했고, 11월 실시한 전격적 화폐개혁은 참담한 실패로 마무리 되었다.⁹⁴⁾ 특히, 화폐개혁으로 한도액을 넘는 구지폐가 휴지조각이 되고, 식료품이나 상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까지 발생하면서 북한주민들은 2000년대 이후 가장 심한 민생고를 겪었고 중산층으로 올라섰던 많은 가계들도 빈민층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북한정권은 2010년에 들어서도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고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김정은의 이름으로 시행된다고 하던 배급제 또한 정상화 하지 않았다.⁹⁵⁾

이처럼 김정은의 이름으로 실시되었던 모든 경제조치들이 실패로 귀결되고 주민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통제만 강화되자 북한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올랐고, 모든 화살은 북한의 새로운 후계자 김정은을 향했다. 평양에서는 “정치·경제가 말이 아닌 것은 김정은 때문이다,” “나이 어린 김정은이 아버지보다 더하다”라는 소문이

94) 『열린북한방송』, 2009. 10. 12.

95) 박형중, “주민불만표출 공안사건 빈발할 듯,” 『통일한국』, 제 326호, (2011), pp.24-25; 『조선일보』, 2011. 6. 2.



주민들 사이에 퍼졌고, 김정일 정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북한정권에 대한 비판도 공공연히 이뤄졌다.⁹⁶⁾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인한 일반주민들의 탈북 현상도 심화되었다.⁹⁷⁾ 김정일의 셋째 아들인 김정남도 일본 기자와의 메일을 통해 화폐개혁의 후유증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북한수뇌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⁹⁸⁾

특히, 북한이 이례적으로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할 것을 통해서도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해 “지난날 수령님께서는 늘 우리 인민들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는데, 우리는 아직 이 유혼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인정하였다.⁹⁹⁾ 이와 더불어 북한의 김영일 총리가 인민반장들 앞에서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였다. 이에 북한은 경제정책의 책임을 물어 김영일 총리를 경질하고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을 화폐개혁의 책임으로 처형하는 등 대폭적인 내각 개편을 실시하였다.¹⁰⁰⁾ 북한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김정일이 직접 비닐론연합기업소 준공 함흥시 경축대회에 참석하기도

96) 『Daily NK』, 2011. 3. 13; 유호열, “2011년 새해 새 아침에,” 『통일시대』 제 69호 (2011) pp.1-2.

97) 북한주민들에 이어 고위급의 탈북도 이어졌다. 2009년 6월에는 양강도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제1비서와 공관장급 외교관, 외화벌이 총회사 사장이 탈북하였고 2010년에는 옥류관의 내팔 지점 책임자, 북한군 러시아 통역관이 탈북하였다. 『조선일보』, 2010. 12. 16.

98) 고미요지, 앞의 책, p. 209.

99) 『로동신문』, 2010. 1. 9.

100) 이기동, “북한 경제개혁의 정치적 조건과 영향: 화폐개혁 조치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 19권, 제 1호(2010), pp. 166-168.



하였다.¹⁰¹⁾ 그동안 시행 해오던 시장의 폐쇄나 외화의 사용금지 조치도 철폐하였다. 북한이 이처럼 단기간에 공개적으로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조치를 해제함과 동시에 김정일이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직접 주민행사에 참석한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이례적인 행보들은 북한 정권과 새로운 후계자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으로 주민들이 정권에 대해 이완되어있는 것이 얼마나 북한정권의 안보에 치명적인지를 반증하는 것이었다.

2) 정권취약성 완화 수단으로서 연평도 포격

김정일의 셋째아들인 김정남의 “북한이 연로한 리더, 경험이 부족한 후계자, 추락하는 경제로 내부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위태로워 보인다”는 발언처럼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의 부족한 이념적·실질적 정통성과 정권에 대한 지배엘리트들과 주민들의 이완현상으로 북한 ‘정권의 취약성’은 매우 높은 수준에 놓여 있었다.¹⁰²⁾ 이처럼 북한의 높은 ‘정권 취약성’은 정권의 생존을 위협 하였고, 북한은 ‘정권의 취약성’을 완화하여 안정적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연평도포격을 전략으로 선택하였다. 즉, 북한은 연평도포격을 통해 지도자에게 이념적·실질적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제적 업적을 마련하고 새로운 정권에 대한 지배엘리트들과 주민들의 결속을 도모함으로써 ‘정권의 취약성’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101) 『로동신문』, 2010. 2. 8.

102) 고미요지, 앞의 책, p. 209.



(1) 취약한 이념적 · 실질적 정통성 극복 수단

무엇보다 북한은 연평도포격을 통해서 김정은의 취약한 이념적 · 실질적 정통성을 극복함으로써 정권의 취약성을 완화하고자 했다. 북한의 이러한 의도는 세 가지 측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로 북한은 김정은의 이름으로 연평도 포격이라는 실제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김정은이 북한정권의 핵심 사상인 ‘선군사상’을 계승한다는 이념적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했다. 사상의 나라인 북한에서 이념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는데,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주체사상’을 심화 · 발전시키고 ‘선군사상’을 개념화 했듯이 김정은에게는 ‘선군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할 책임이 있었다.

북한이 이처럼 김정은의 이념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평도포격을 감행했다는 것은 연평도포격사건 전후로 ‘선군사상’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가운데 김정은의 이름으로 연평도포격을 감행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은 먼저 연평도포격사건 일주일 전 “총대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총대로 수호하고 계승하여 완성하려는 것은 우리당의 변함없는 신념이며 의지이다,” “광명성 2호, 위성발사도 ‘선군사상’으로 인해 가능할 수 있었다”며 김정은의 후계체제에서도 ‘선군사상’을 계승 · 발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김정은의 업적으로 거론되는 광명성 2호와 위성발사를 ‘선군사상’과 연결시켜 김정은에게도 ‘선군사상’을 계승할 수 있는 명분과 업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였다.¹⁰³⁾ 연평도 포격 이틀 전에는 ‘조선인민내무군열성자대



회'참가자들을 만나 “‘선군’이 북한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보루이므로 ‘선군’의 가치를 높일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¹⁰⁴⁾ 북한은 이처럼 내부적으로 ‘선군사상’을 강조하는 가운데 김정은의 이름으로 연평도포격을 감행함으로서 ‘선군사상’이 후대체제에서도 계승·발전될 것이라는 것을 군사도발이라는 실제적 업적을 통해 보여주고, 김정은의 부족한 이념적 정통성을 채우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평도포격은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에게 ‘선군사상’을 핵심사상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 업적이 됨으로써 김정은의 부족한 실질적 정통성을 채워 줄 수 있었다. 특히,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은 “현재 전에서 포병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고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포병부터 배운 포에 밝은 군사적 영재”로 우상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포를 직접적으로 활용한 대남군사도발인 연평도포격은 김정은에게 확실한 실제 업적이 될 수 있었다.¹⁰⁵⁾ 더욱이 남한의 영토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도발인 연평도포격은 당대표자회의를 통해 신설된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써 ‘선군사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능력과 카리스마를 지배엘리트들과 주민들에게 과감하게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실질적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¹⁰⁶⁾ 이에 북한은 김정은의 이름으로 연평도포격을 감행함과 동시에 연평도포격사건 발생 직후 김정은이 직접 연평도포격부대를 방문하여 “일촉즉발의 첨

103) 『로동신문』, 2010. 11. 17.

104) 『로동신문』, 2010. 11. 21.

105) 허라이 하사시, 앞의 책, p. 70.

106) 『조선일보』, 2010. 12. 1.



예한 정세가 조성된 조건에 맞게 최대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적들이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조국의 바다에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원쑤의 머리위에 강력한 보복타격을 안기라”고 지시를 내렸다.¹⁰⁷⁾ 이처럼 연평도포격전 이뤄진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내용과 연평도포격사건이후 김정은의 행동과 언급은 연평도포격사건을 부족한 김정은의 실질적 정통성 확보에 이용하고자 한 북한의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2) 정권에 대한 지배엘리트들의 결속 도모 수단

둘째로 김정은은 연평도포격을 통해 새로운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지배엘리트들의 결속을 도모하여 안정적 후계체제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권의 취약성’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북한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연평도포격을 감행했다는 것은 세 가지 측면을 통해서 확인 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연평도포격사건을 전후로 ‘외부 적’의 위협을 강조하는 북한의 행동과 언급들을 통해서 내부적 긴장을 고조시켜 지배엘리트들을 정권에 결속시키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은 군(軍)창건 78돌을 맞아 개최된 ‘중앙보고대회’에서 “미국과 남한의 무모한 전쟁도발 책동으로 인하여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미국은 남한과 함께 우리를 선제공격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외부 적의 위협’을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내부적인 긴장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북한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선군혁명의 전위부

107) 『Daily NK』 2010, 11. 20.



대, 주체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이야 말로 미국과 남한에 대응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수 있는 세력”이라 주장하였는데, 북한은 이와 같은 주장들도 ‘외부 적의 위협’으로 고조된 내부적 긴장을 활용해 정권에 대한 군부엘리트들의 결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¹⁰⁸⁾

연평도포격사건 한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군부엘리트들을 독려하기 위한 김정은의 행보들도 연평도포격을 수단으로 지배엘리트들의 결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김정은은 당대표자회의에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대장으로 선출된 후 공식적인 최초 현지지도로 제 851부대의 ‘포격훈련장’을 선택하였다.¹⁰⁹⁾ 군부대의 ‘포격훈련장’을 최초의 현지 지도 장소로 선택한 것은 북한내부에서 포격전문가로 알려진 김정은이 자신의 전문성을 과시하여 군부지배엘리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¹¹⁰⁾ 이와 더불어 김정은은 연평도포격 한 달 전 김정은의 이름으로 “적의 도발행위에 언제라도 반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북한군 간부에게 하달함으로써 군부가 김정은의 지시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¹¹¹⁾ 연평도포격사건 하루 전에는 직접 ‘조선인민군내무열성자대회’를 방문하여 군부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이에 로동신문은 ‘총 폭탄, 결사옹위’라는 구호와 함께 김정은과 수 백 여명의 군인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통해 김정은의 대회방문을 공개하기도 하였다.¹¹²⁾ 연평도포격사건 발생 하루 전 이

108) 『로동신문』, 2010. 4. 23 - 25.

109) 『로동신문』, 2010. 10. 5.

110) 『Daily NK』, 2011. 7. 25.

111) 『조선일보』, 2010. 12. 1.

112) 『로동신문』, 2010. 11. 22.



처럼 김정은의 대회 방문을 사진으로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연평도포격사건 전에 이뤄진 김정은의 이러한 행보와 언급들은 연평도포격을 수단으로 군부의 결속을 도모하고자 한 북한의 의중을 보여주는 것이었다.¹¹³⁾

연평도포격사건 전후를 기점으로 북한 지배엘리트들의 대규모 교체가 이뤄졌다는 점을 통해서도 연평도포격을 통해 정권에 결속되어있는 지배엘리트들과 이완되어 있는 지배엘리트들을 가려내고자 한 북한정권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은 9월 28일 당대표자회의를 통해 많은 수의 지배엘리트들을 교체하였는데, 북한에게는 여전히 김정은에 충성스러운 엘리트와 이완되어 있는 엘리트를 가려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었다. 특히, 연평도포격사건이 발생하던 시기는 북한에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시기로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은 기존의 지도자에 충성을 하던 엘리트들이 새로운 지도자에 충성을 할 수 있는지를 시험할 필요가 있었다. 이처럼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신·구 엘리트 간에 자연스러운 세력교체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북한에게는 상대적으로 위험감수적 정책인 연평도포격은 엘리트들을 가려내는데 있어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위험감수적인 전략인 연평도포격을 통해 북한은 충성심이 강한 엘리트들의 욕구를 충족 시킴과 동시에 정권에 이완되어있거나 추후 위협세력이 될 수 있는 엘리트들을 숙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¹¹⁴⁾ 즉, 연평도포격을 감행하는 과정을 통해 김정은에게 충성스러운 엘리트들은 더욱 충성을 유

113) 『朝日新聞』 2010. 12. 1.

114)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특별인터뷰: 이갑진 전 해병대사령관,” 『NK Vision』, 제19호(2011), p.25.; 이수석, “2012 북한의 대남정책)방향과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2011). ; 고미요지, 앞의 책 p.79, 114.



도하고, 연평도 포격에 반대하는 세력이나 그동안 제거하기 어려웠던 지배엘리트들은 군사도발을 계기로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미리 제거함으로써 추후 분열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¹⁵⁾

이처럼 연평도포격이 정권에 결속되어 있지 않은 지배엘리트들을 가려내는 차원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연평도포격 사건 이후 연평도포격사건과 관련된 군부의 주요인물들이 직위해제 되거나 처형당함과 동시에 대대적인 간부교체 사업이 진행됐다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¹¹⁶⁾ 연평도포격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11월과 12월 도·시·구역 당·기관 및 기업소의 당위원회에서는 대대적 간부교체가 이뤄졌는데 김일성을 보좌하던 60대 이상의 간부들이 김정은을 상대적으로 잘 보좌할 수 있는 김정은 또래의 30~40대 젊은 층으로 교체되었다. 특히, 연평도포격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김격식 4군단장이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되고 리영호 총참모장이 ‘반당(反黨)·반혁명분자’라는 명분으로 숙청된 이후 군 수뇌부의 대거 교체가 이뤄졌는데, 이는 연평도포격을 계기로 상대적으로 제

115) 얼마 전 김정은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의 연설을 통해 “당과 지도자에 충실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군사가 다운 기질을 작고 작전·전술에 영활하다해도 우리에게 필요 없다,” “역사적 교훈은 당과 지도자에 충실하지 않는 군인은 혁명의 배신자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했는데 이러한 김정은의 언급은 리영호와 김격식 처럼 연평도포격을 주도한 업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과 지도자에게 충실하지 않으면 결국 숙청당할 수 있다는 사실과 당에 대한 지배 엘리트들의 분열을 김정은이 매우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아일보』, 2012. 11. 25; 남성욱, “2011년 심묘년 한반도 통일의 급행열차를 타고 싶다,” 『통일시대』 제68호(2011),

116) 연평도포격 진후로 북한이 남한과 대화에 나섰거나 남북대화를 담당했던 협상 파트너 30여명 가량이 총살과 교통사고 처리 등으로 제거되었는데, 이는 연평도포격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권에 이완되어 있는 엘리트층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동아일보』, 2011. 7. 15.



거하기 어려운 엘리트들을 제거하고자 한 북한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¹¹⁷⁾

(3) 정권에 대한 사회 결속 도모 수단

마지막으로 북한은 연평도포격이라는 위기상황을 통해서 계속된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정권과 새로운 후계자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함으로써 주민들의 결속을 도모하고자 했다. 정권의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주민들의 절대적 충성심이 요구되었는데,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일의 주도하에 실시된 경제정책의 계속된 실패로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올라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평도포격은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과 심리적 동요를 일시적으로 외부위협으로 돌리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다.

이처럼 북한이 대내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연평도포격을 감행했다는 것은 연평도포격사건이 발생하기 전후를 기점으로 북한이 각종 대회와 로동신문을 통해서 외부위협에 대한 ‘내적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북한은 무엇보다 확실하게 ‘외부 적의 위협’을 규정함으로써 외부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비라는 명분하에 주민들을 통제하고 결속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에 북한은 평양 시에서 ‘미제와 이명박 패당의 반공화국 대결 모략

117) 정승조 합창의장은 리영호의 실각에 대해 “권력 갈등에 의해 제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마이미니 신문은 10월 중순 리영호가 ‘반당·반혁명분자’로 결정한 사실을 북한 노동당이 중견간부들에게 알렸다고 보도했다. 『Daily NK』, 2012 7. 16.; 『세계일보』, 2012. 7. 20. 『조선일보』, 2012. 11. 25.



책동을 규탄하는 군중대회’를 개최하고 “한반도에는 남한의 호전 광들과 미일 침략자들의 전례 없는 반공화국 대결 모략책동으로 북남 관계가 전면파국에 처하고 당장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 되고 있으므로 “주민들은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만반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야한다”면서 주민들의 결속을 도모했다.¹¹⁸⁾ 이와 동시에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제재 봉쇄책동으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강화해야한다”면서 외부위협에 대한 대내결속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연평도포격사건이 발생하기 열흘 전 부터는 “군민(軍民)의 대단결이 선군조선의 위력의 원천이자 강성대국의 문을 열기 위한 기반”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정권에 대한 군과 민의 대내결속의 강도를 더욱 높이려고 하였다.¹¹⁹⁾

연평도포격을 주민들의 내부결속에 이용하고자 하는 북한의 이와 같은 의도는 연평도포격사건 발생 직후 북한의 언급을 통해 더욱 확실해졌다. 북한은 연평도포격사건 직후 “강성대국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도자의 의지와 그것을 실현하는 군대와 인민의 단결력”이라 주장함으로써 연평도포격사건을 계기로 조성된 내부의 긴장을 활용해 ‘인민들의 단결’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¹²⁰⁾ 이와 같은 북한의 ‘주민단결’에 대한 거듭된 강조는 연평도포격을 통해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결속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북한의 절박함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연평도포격사건 전후로 갑자기 증가한 김정일과 김정은의 현

118) 『조선중앙방송』, 2010. 5. 30.

119) 『로동신문』, 2010. 11. 12-13.

120) 『로동신문』, 2010. 11. 27.



지 활동 또한 연평도포격을 계기로 주민들을 결속시키고자 한 북한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 김정일과 김정은은 연평도포격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부터 일주간 7차례의 공개 현지지도 활동을 했는데, 대부분이 민생사업현장을 시찰하고 학교를 방문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어있는 것이었다.¹²¹⁾ 이처럼 김정일과 김정은이 주민들과 연관된 현지지도를 직접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연평도포격을 통해 높아져 있는 대내적 위기상황에서 김정일과 김정은이 함께 직접 현지지도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여 대내적인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 3절: 소 결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남한에 대해 연평도포격을 감행했다. 북한이 연평도포격을 감행한 것은 높은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과 ‘정권 취약성’때문이었다. 북한은 천안함폭침 사건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지원의 중단, 한·미의 계속되는 군사훈련, 중국의 불안정한 지지로 외부위협수준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한·미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중국의 적극적

121) 11.22-28일 6일 간 용연 바닷가 양어 사업소와 용정 양어장 현지지도(11.22), 용호 오리공장 현지지도(11. 22), 용성 식료공장에 새로 건설된 간장 직장 현지지도(11.24), 김일성종합대학 평양 의학 대학 현지지도(11.23), 대안 천선유리공장 및 강서 약수 가공공장 현지지도(11. 24), 해방산 기슭에 새로 건설된 살림집과 개간된 평양 무용대학 현지지도 (11.25)등 총 7번의 현지지도가 이뤄졌는데, 이 현지지도 모두 북한 주민의 민생과 관련된 것으로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로동신문』, 2010, 11. 22; 『조선중앙통신』, 2010. 11. 23; 『로동신문』, 2010, 11. 24; 『조선중앙통신』, 2010. 11. 25.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했지만 이 노력들도 모두 실패로 귀결되었다. 이에 북한의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수준에 놓이게 되었고, 북한은 외부위협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일종의 강압수단으로 연평도 포격을 선택했다. 연평도포격이라는 고강도 위기조성 정책을 통해 미국과 남한을 압박함으로써 대북정책전환을 이끌어 내고, 중국의 우려를 자극하여 중국의 적극적 지원 또한 이끌어내고자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연평도포격을 수단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던 정권의 취약성 또한 완화하고자 했다. 북한 정권의 취약성은 갑자기 북한의 새로운 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일의 부족한 이념적·실질적 정통성과 북한정권에 대한 지배엘리트들과 주민들의 이완 현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놓여있었다. 이에 북한은 연평도포격을 통해 ‘선군사상’을 계승한다는 것을 실제적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이념적·실질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외부의 적’에 실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배엘리트들과 주민들의 결속을 도모하고자 했다.

북한은 이처럼 ‘외부위협수준’을 높다고 인식하고 ‘정권취약성’ 또한 매우 높을 때 두 변수의 수준을 완화할 수단으로 대남군사도발인 연평도포격을 선택했다. 이와 같은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본고의 핵심주장인 ‘외부위협의 수준’을 높다고 인식하고, ‘정권의 취약성’의 수준 또한 높을 때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



제 4장 2000년~2001년

남한과 북한과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던 해인 2000년부터 부시정권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지정하기 전인 2001년까지 북한은 남한에 대한 군사도발을 감행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이 시기 북한이 남한에 대해 군사도발을 감행하지 않은 요인은 북한의 낮은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과 ‘정권의 취약성’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시기 북한의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은 적대국가로 여겼던 수많은 서방세계와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고, ‘정권 취약성’ 또한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고 ‘선군정치’를 통한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국가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낮은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와 같은 낮은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과 정권취약성은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이 시기는 본고의 가설에서 제시한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하게 되는 조건인 높은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과 높은 ‘정권의 취약성’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남군사도발의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먼저, 2000년에서 2001년 시기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변화를 통해 북한의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권의 취약성’을 구성하는 김정일 정권의 이념적·실질적 정통성 여부, 정권에 대한 지배엘리트와 사회 결속도를 살펴봄으로써 정권의 취약성이 어떠한 수준에 있었는지를 볼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과 정권의 취약성이 어떤 수준에 있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본시기 북한이 대남군사도발을 감행할



요건이 형성되어있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제 1절: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낮은 인식

1)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2000년에서 2001년 북한의 외부위협수준에 대한 인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다. 먼저, 2000년 들어 북한이 적대적으로 여기던 수많은 서방세계국가와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으로 형성된 우호적 외부환경은 북한의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¹²²⁾

이와 같은 우호적 외부환경은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이 표방한 대북 ‘햇볕정책’을 북한이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이뤄졌다. 북한은 200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남한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던 1999년과 달리 남한의 대북포용정책이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문제, 남북대화에 대한 비난을 자제했다.¹²³⁾ 이와 동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경제지원, 평화정착, 이산가족 문제해결 및 당국 간 대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화해 협력선언 발표’에 대해 북한은 “남조선당국이 대결정책에서 벗어나 실지 행동으로 변화를 보인다면 허심탄회하게 협상할 것이며, 우리의 원칙적 입장에

122) 서보혁은 1998-2000년 사이 남·북·미 삼각관계가 한국전쟁 이후 가장 긍정적인 양상을 나타냈다고 보았다. 서보혁, “탈냉전기 한반도 안보질서 변화에 관한 연구: 남 북 미 전략적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 『국가전략』, 제 14권, 제 2호(2008), pp. 74-75.

123) 김경숙, “2000년 이후 북한 신년공동사설을 통해본 북한의 대남정책,” 『북한연구』, 제 10권(2008) p.4.



부합된다면 아무 때나 대화와 접촉은 이루어질 수 있다”며 남한의 포용정책을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¹²⁴⁾ 6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북한이 남한의 당국자회담제의를 수용하여 남·북 분단 이래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수차례 경제 및 군사회담이 이뤄졌고, 김용순 노동당 비서의 서울 방문으로 남과 북의 해빙무드는 더욱 고조되었다.¹²⁵⁾ 북한은 이러한 남과 북의 화해 분위기를 평양 시민의 편지를 통해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길 목적 밑에 북남합의서가 발표된 소식을 들으니 너무나 기쁘다”며 우회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6.15공동선언 채택 이후로 북남관계가 협력의 단계에 들어서 긍정적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¹²⁶⁾ 2001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2000년 장관급회담에서 문제가 되었던 ‘주적’문제에 대한 언급이나 대남 비난 없이 외세와의 의존 및 외세와의 공조에서 탈피하여 ‘동족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¹²⁷⁾ 북한의 이러한 태도와 발언은 한국정부가 포용정책을 처음 발표했을 때 ‘속에 칼을 품고하는 협력타령’이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하던 것에서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남한에 대한 북한의 위협 인식이 낮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 또한 북한의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정일 정권 출범당시 북·미 관계는 1998년 금창리 지하핵 시설 건설의혹과 북한의 미사일

124) 『로동신문』, 2000. 3. 15.

125) 정상회담 이후 장관급 회담 6회, 국방장관회담 1회, 군사실무회담 5회, 적십자회담 3회, 경제협력추진위원회 1회 경험관련 실무접촉이 5회, 등 남과 북의 교류가 다방면으로 확대되었다.

126) 『로동신문』, 2000, 7. 18.

127) 『로동신문』, 2001. 1. 1.



발사로 제네바합의 이후 최악의 국면에 처해있었는데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미국 또한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미국은 부분적 대북제재 해제에 이어, 2000년 6월 그 동안 북한을 지칭하는데 사용해왔던 ‘불량국가(Rogue State)’라는 용어대신에 ‘우려 대상국(State of Concern)’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대북접근의 유연성을 내보였다.¹²⁸⁾ 이와 더불어 2000년 10월에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미국 올브라이트(Madeleine Korbelt Albright)국무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게 클린턴(William J. Clinton)대통령의 방북과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합의를 약속했다. 이 날 미국은 북·미 공동 코뮤니케(US-DPRK Joint Communiqué)를 통해 그동안 북한이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인 ‘양국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 긴장상태 완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4자회담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다’는 약속을 했다.¹²⁹⁾ 이 공동성명은 한국전 이후 50년간 계속된 적대적 북·미관계의 공식적 종언을 선언한 것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요구해온 사항을 미국으로부터 확답을 받은 것이었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로 북한의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완화되었는데, 2001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은 매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미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해왔는데 2001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미국에 대한 비난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오히려 북한은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이

128) 박영호, “남북한 및 미국의 3자관계와 평화공존,”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제 23호 (2002), pp. 35-36.

129) 미·북 공동코뮤니케는 ① 북한의 장거리 개발 포기 ② 양국간 적대관계 청산, 미국의 북한체제 보장 및 경제지원 ③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안 활용 ④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준비를 위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U.S. Department of State, “U.S.-D.P.R.K. Joint Communiqué”, *U.S. Department of State*, (October 2000).



라면 그 어떤 나라든지 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만을 내비쳤다.¹³⁰⁾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과의 우호관계 회복도 북한의 외부 위협에 대한 인식을 낮추는 요소였다. 중국과의 실질적 관계 개선은 2000년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해 강택민(江澤民) 중국주석과 회담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회담은 1983년 중국 당 총서기 초청에 의한 방중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이 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것을 치하함과 동시에 ‘쌍방 관계 가일층 발전을 위한 5가지 협력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¹³¹⁾ 2001년 이뤄진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이 회담에서 강택민 주석은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조치를 치하하고 북한이 미국 유럽연합과 관계를 정상화 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재천명하였다. 이와 동시에 식량 20만 톤과 디젤유 3만 톤의 무상원조 또한 약속했다.¹³²⁾ 이처럼 북한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했던 적극적 지원과 경제적 무상지원 모두를 얻어냈는데,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던 상황에서 전통적 우방국이 중국의 적극적 지원은 북한의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을 더욱 낮추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 한국, 중국을 제외한 다양한 다른 서방국가들과의 계속되는 수교 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외부환경을 더욱 우호

130) 『로동신문』, 2001. 1. 1.

131) 통일부, “북한동향,” 『통일부』, 제 489호 (2000), pp. 3-4.

132)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벼랑에 선 줄타기 외교의 선택』 (서울: 백산서당, 2002), pp. 164-167.



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먼저, 북한은 2000년 러시아와 최초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친선관계 발전을 천명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2001년에는 김정일이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로부터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지지하며 한반도에서 미국이 철수해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북한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냈다.¹³³⁾ 러시아와 관계개선에 더불어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이뤄졌는데, 일본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해빙모드로 전환하자, 1999년 11월 북한에 대한 직항 전세기 운항 중지조치를 해제했다. 이와 더불어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일행이 북한을 방문해 국교정상화 교섭재개에 합의하고 12월 대북제재를 해제하기도 했다.¹³⁴⁾ 적성 국가로 여겨지던 서방국가들과 북한의 수교도 시작되었다. 북한은 1999년 호주와의 외교 관계정상화를 시작으로 2002년 3월을 기점으로 아일랜드와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EU(European Union)국가와 수교를 맺었다.¹³⁵⁾ 특히, EU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는 경제관계의 정상화로 이어져 북한은 EU국가들을 통해 국제사회와 경제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처럼 북한은 2000년에서 2001년이라는 1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수많은 서방세계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그 동안 국제사회에 요구했던 대북제재 해제와 대북지원 등과 같은 수많은 조건들을 받음으로써 ‘외부위협 수준’을 매우 낮게 인식하였다.

133) 『중앙방송』, 2001. 9. 6.

134) 통일부, “북한동향,” 『통일부』, 제 501호 (2000), pp. 19-25.; 통일부, “북한개요,” 『통일부』, (2000), p.211.

135) 통일부, “북한동향,” 『통일부』, 제 531호(2000), p. 26.



2)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와 대북지원

두 번째로 북한의 외부위협에 인식을 낮춘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와 함께 이뤄진 대폭적인 대북 지원이었다. 북한은 1996년부터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는데, 북한 내부에 홍수와 기근이 겹치면서 30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제사회는 1999년을 전후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대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 했는데 특히,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는 북한의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은 2000년 6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북한의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발표했는데 이 조치는 1995년의 제 1차 경제제재 완화조치와 달리 금융 투자 무역 부분의 규제를 상당부분 해제한 실질적인 완화조치였다.¹³⁶⁾ 이와 동시에 미국은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의 전체 대북지원액 67%에 달하는 양인 150만 여 톤의 대북식량지원을 실시했다.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차원에서의 대북지원도 이뤄졌다. 한국은 1997년부터 국제적십자와 정부직접 지원을 통해 북한을 지원해 왔는데 2000년 한국의 대북지원액은 약 1,757억 원에 달했으며,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액만 해도 110억 원에 달했다.¹³⁷⁾ 일본도 수교 논의 재재와 함께 2000년

136) 북한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의 주요 내용은 첫째 ① “적성교역법”에 의거한 “외국자산통제규정”을 개정, 재미교포를 포함한 미국인의 대북송금 및 개인 상업적 금융 자산거래를 가능 ② “수출관리법”에 의거한 “수출 관리규정”을 개정, 미국 산 소비재와 용역을 수출하고 북한산 원자재 물자를 수입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농업 광업 분야의 투자를 허용 ③ 미 선박 항공기의 대북 물자수송과 대북운항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통일부, “북한동향,” 『통일부』, 제 492호 (2000), pp. 9-10

137)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241> (검색



10월 50만 톤의 대북식량지원을 약속했다. 중국은 6개년 경제계획과 더불어 북한에 매년 식량 50만 톤과, 원유 130만 톤, 석탄 250만 톤을 매우 싼 가격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무상지원을 실시하였다.¹³⁸⁾

<표 4>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실적 (1995. 9~ 2002. 12 .31.)

구분	지원액	주요 기여국 별 지원액(단위: 만 달러)
1차 '95.9~'96.6	92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34,390	한국 300 미국 700 일본 600 EU 860 등
3차 '97.4~'12	15,838	한국 2,413 미국 4,500 일본 2,700 EU 2,700 노르웨이 300 캐나다 320
4차 '98.1~'12	21,587	한국 1,100 미국 17,000 EU 950 노르웨이 300 덴마크 350 등
5차 '99.1~'12	18,989	미국 16,000 EU 800 스웨덴 380 캐나다 340 호주 270
6차 '00.1~'12	22,414	한국 53,809 미국 29,228 호주 699 캐나다 383 등
7차 '01.1~'12	37,759	일본 10,489 미국 10,269 한국 6872 이탈리아 707등
8차 '02.1~'12	36,083	한국 8,200 미국 63,490 EU 15,526 독일 4,70

*출처: Financial Tracking Service <http://fts.unocha.org> (검색일: 2012. 9.20)

*지원액= 실제지원액 + 지원을 약속한 금액

*지원액에는 민간단체와 다른 기관에서의 지원금액도 포함되어 있음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털어주기 위한 유엔(UN, United Nations)차원의 대북지원도 실시되었다. 북한은 1995년 8월 북한의 유엔인도지원조정국(OCHA,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색일: 2012. 8. 29)

138) 이금순 “대북인도적 지원개선방안: 개발구호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제 32호 (2000), p. 48.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에 처음으로 공식적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에 유엔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대북지원을 시작했다. 북한의 식량난이 시작된 1995년부터 6년간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한 규모는 2001년 7월 말을 기준으로 총 20억 3,931만 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으로 인해 북한은 1999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해 매번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사항과 지원현황을 개재해 왔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한 환영의 의사를 반증하는 것이었다.¹³⁹⁾ 이처럼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와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통한 우호적 외부환경조성은 북한의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을 낮추는데 있어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제 2절: 낮은 정권의 취약성

2000년에서 2001년 시기 북한정권은 정권의 이념적·실질적 정통성, 지배엘리트와 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결속도 차원에서 ‘정권의 취약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 김정일은 1994년 김일성의 사망 이후 3년간의 ‘유훈통치’를 종결하고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1차 회의를 통해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됨으로써 정권의 출범을 공식화 했는데, 이 시기 김정일의 후계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으로써 정권의 취약성은 더욱 낮은 상태에 놓였다.

139) 『조선중앙방송』, 2000. 2. 12.; 『로동신문』, 2000. 3. 12.; 『로동신문』, 2000. 7. 2.



1) 김정일의 확고한 이념적·실질적 정통성

무엇보다 김정일 정권의 취약성을 낮춘 것은 김정일이 1972년 12월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약 14년에 가까운 시간을 후계계승사업에 매진하여 확보한 이념적·실질적 정통성이었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이후 1998년 10월 김일성의 ‘군사상’을 수용하여 김정일 정권의 핵심사상인 ‘선군사상’을 제시함과 동시에 1970년대부터 김일성이 강조해온 ‘사회주의 완전승리’이론을 새롭게 각색하여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국가의 목표로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김정일은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이념적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¹⁴⁰⁾ 김일성과 달리 김정일은 항일무장투쟁의 경력이나, 전설, 신화가 없었는데, 이에 김정일은 ‘유훈통치’기간을 통해 자신이 위대한 수령의 후계자라는 것을 확실히 함과 동시에 김일성의 사상과 전략을 수용·변형하여 북한을 이끌어 나갈 김정일 자신만의 전략과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이념적 정통성을 확보하였다.¹⁴¹⁾

이와 더불어 김정일은 자신이 내세운 ‘선군사상’을 대내외적 업적과 연결시키고 이를 북한 내부적으로 선전함으로써 자신의 이념적 정통성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다.¹⁴²⁾ 김정일은 먼저 ‘선군사상’을 통해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0년대부터 이뤄진 서방세계와의 수교들에 대해 “최근 미·일

140) 『로동신문』, 1998. 10. 20.; 김정일, 『김정일 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12), p. 452; 현성일, 앞의 책 286

141)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서울: 일신사, 1997), pp. 266-269.

142) 전현준, 『김정일 정권의 분야별 정책변화 추이 분석: 로동신문 1994. 7. 4 - 2001. 11. 31) 사설·정론·논설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28, 92.



이 대조선 제재해제를 제창하는 것은 선군정치에 의한 자주외교의 결실”이며 “선군정치로 하여 우리식의 군가체제와 강력한 외교 전략이 마련되었다”며 서방세계와의 관계정상화를 ‘선군사상’의 업적으로 만들었다.¹⁴³⁾ 2001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서도 “선군정치는 김정일 장군이 역사상 처음으로 내놓은 독창적인 정치방식으로 혁명과 건설을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자기 식으로 해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위력한 정치방식”이자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최상의 높이로 끌어올리는 위대한 정치이며 우리 혁명의 만능의 보감이다”라며 대내적으로 ‘선군사상’의 위대함을 선전하였다.¹⁴⁴⁾ 이처럼 김정일은 모든 대내외적 업적을 자신이 수립한 ‘선군사상’의 덕으로 돌리고 이를 대내적으로 선전함으로써 확고한 이념적 정통성을 확보하였다.

김정일은 ‘선군사상’을 실제 군사적 행동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군사적 차원의 실질적 정통성 또한 확보할 수 있었다. 북한은 김일성의 ‘유훈통치’가 끝나는 해인 1997년 AG-1 대함 트루즈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선군사상’을 선포한 해인 1998년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와 동시에 1999년에는 로동신문의 사설을 통해 “백두의 혈통을 이어받은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이다,” “우리나라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위대한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자”라며 선군정치를 강조하면서 남한에 대한 직접적 군사도발인 제1차 연평해전을 일으켰다.¹⁴⁵⁾ 이 모든 군사적 행동들은 북한이 98년부터 강조하고 있는 ‘선군사상’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시킨 것으로 김정일에게 군사적 실질적 정통성을 확보해 주

143) 서재진, “북한 신사고론의 의도 및 내용 분석,” 『통일연구원 통일정세 분석』, 제1호 (2001), p.5; 『로동신문』, 2000. 1. 3.; 『로동신문』, 2001. 2. 28.

144) 『로동신문』, 2001. 1. 1.

145) 『로동신문』, 1999. 9. 5.



는 것이었다.

김정일은 2000년 ‘고난의 행군’을 극복함으로써 경제적 차원의 정통성 또한 확보할 수 있었다. 1996년부터 시작된 극심한 경제난으로 김정일의 경제적 정통성이 의심이 대상이 되자 김정일은 ‘강성대국 건설’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실리주의’를 통해 정책적 변화를 추구했다. 이념만 앞세워 실익을 배척하던 경직된 모습을 버리고 실익을 챙김으로써 경제적 차원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¹⁴⁶⁾ 경제적 정통성을 확보하기위한 북한의 행보는 1998년 경제개방을 시사한 헌법 개정과 대외지원을 받기 위한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에 가입의사를 표명, 1995년의 유엔에 대북 식량지원을 요청으로 이어졌다.¹⁴⁷⁾ 북한의 경제문제 해소를 위한 이와 같은 다양한 행보와 요청으로 유엔과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해제와 함께 대규모 대북지원을 실시했는데, 이를 통해 북한은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1999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2000년 ‘고난의 행군’ 극복을 선포할 수 있었다.¹⁴⁸⁾ 북한은 내부적으로 “김정일이 “복잡다단한 세계정치를 주도”하는 21세기의 지도자이기에 고난의 행군을 극복했다고 주장하며 경제난 극복과 관련된 모든 업적을 김정일의 우상화에 연결시켰다. 이를 통해 김정일은 경제적 정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권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었다.¹⁴⁹⁾

146) 정영태 외 4명, “2001년도 북한의 대내외 정책 전망,” 『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제 2호 (2001), pp. 3-4; 김정일, 『김정일 선집 15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12), p.12.

147) 김학성, “2000 대북포용정책 추진 2년의 평가,” 『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제 8호 (2001), pp. 8-9.

148) 전현준, 앞의 책, pp. 126-135.

149) 『로동신문』, 2001, 1. 1.



<표 5>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항목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명목 GNP (십억원)	17,255	16,814	17,597	18,741	18,977	20,287
1인당 GNP (만원)	78	75	78	83	83	88
실질성장률(%)	-3.4	-6.5	-0.9	6.1	0.4	3.8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검색일: 2011.10. 11)

2) 정권에 대한 지배엘리트의 높은 결속도

둘째로 장기간의 후계세습 과정을 통해 당·정·군의 엘리트들 확실히 장악함으로써 확보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배엘리트들의 높은 결속도는 정권의 취약성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김정일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배엘리트들의 높은 결속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먼저, 김정일은 북한의 주요 지배엘리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조직적 정비를 단행함으로써 정권에 대한 엘리트들의 결속도를 높였다. 지배엘리트들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는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서 이뤄졌는데, 여기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권위와 위상강화를 목적으로 내세웠던 주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회를 강화함과 동시에 자신이 국방위원장에 재취임하여 지배엘리트들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 김정일은 이와 같은 제도적 개편을 통해 국방위원장으로써 군부를 직접 장악·통제하고 지배엘리트에 속할 수 있는 집단을 군부로 축소하여 정권에 대한 지배엘리트들의 충성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¹⁵⁰⁾ 이와 더불어 김정일은 김일성시대 당 정치국 중심으로 편성되어있는 권력구조를



모두 비서국으로 집중시키고 모든 정책결정을 김정일의 측근 엘리트
를 통해 내리거나 김정일이 직접 지시함으로써 북한의 모든 권력 구
조를 김정일에게 집중시켰다. 이로 인해 모든 정책과 인사결정권이 김
정일에게 이관되고, 김일성시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정치국과 전
원회의는 김정일의 결정을 추인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¹⁵¹⁾ 또한, 김
정일은 경제문제를 내각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자신은 국방위원장으로
써 국방과 안보만 전담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악화된 경제문제로 인한
지배엘리트들의 불만을 내각이 책임지도록 만들었다. 즉, ‘통치는 하되
책임지지 않는’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지배엘리트들의 정권에 대한 불만
을 분산시키고 지도자에 대한 결속을 이끌어 내고자 한 것이다.¹⁵²⁾

이와 더불어 지배엘리트들의 대거 교체도 이뤄졌다. 김정일은
자신이 도입한 실용주의 노선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소장파 관료들
을 대거 등용하고 정권에 이완되어있는 노장파들을 퇴출시켰다. 이로
인해 북한 내각의 34명 중 23명이 새로운 인물로 구성되었다. 김정일
은 이처럼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로 대거 교
체를 함으로써 정권에 대한 지배엘리트들의 결속도를 더욱 높였다.¹⁵³⁾

김정일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군부엘리트들에 대한 신뢰를 표시

150) 한병진, "북한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가전략』 제 15권 제 1
호 (2009), p.129.

151) 서대숙, 『현대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p.
223 ; 김갑식, 『김정일 정권의 권력구조』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5), pp.
12-16.

152) 김정일 간부들에게 “생전에 나에게 절대로 경제사업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
“경제사업에 말려들면 당사업도 못하고 군대사업도 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반
복해서 발언한 것을 통해 김정일이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김인옥, 『김정일장군 선군정치 이론』 (평양: 평양출판사,
2003), p. 227.; 현성일, 앞의 책, pp. 275-280.

153) 돈 오버더퍼. 앞의 책 , p.600.



함으로써 김정일에 대한 군부엘리트들의 결속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김정일은 북한내부의 경제난과 식량위기로 군량미와 기름이 고갈되어 군인들의 기강해이가 일어나자 군대를 사회가 따라 배워야 할 본보기로 제시하면서 군부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김정일 자신이 직접 군부대 및 군 관련 행사에 매주 참석함으로써 군부의 결속을 높이고자 하였다. 김정일이 1995년부터 2001년의 기간 동안시찰한 군부대의 수 만해도 814개단위에 이르렀다.¹⁵⁴⁾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6돌 맞이 중앙대회, 군 창건 67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등의 군 관련 행사에서는 ‘군사중시 정책의 당위성’과 ‘김정일 체제 결사옹위 촉구,’ ‘수령 결사옹위정신’등을 강조함으로써 군부의 충성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김정일은 군부엘리트에 편향된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군부를 더욱 정권에 결속시키고자 하였다. 김정일은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백학림, 이용무 등 군 원로들의 서열을 당중앙위원회 비서들보다 상위에 배정하였으며, 군 간부 79명에 대한 장성급 승진인사를 단행하였다.¹⁵⁵⁾ 군부 측근들에 대한 최상의 대우 보장과 식량의 우선공급과 같은 ‘군우대’ 정책도 실시되었다. 김정일은 이와 같은 다각도의 ‘군 우대정책’을 통해 반체제 집단으로 돌변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진 마지막 보루인 군부를 확실하게 장악함으로써 정권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었다.¹⁵⁶⁾

154) 송호근,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 『월간조선』, (1997), p.307; 최주환, “북한군의 후방사업이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 『통일정책연구』, 제 1권, 제 2호(1998) pp.48-58; 현성일, 앞의 책, p.283.

155) 전현준, 앞의 책, pp. 95-96.

156) 현성일, 앞의 책, pp. 267-268.



<표 5-1 > 1994년 이후 김정일 공개 활동 중 군 관련 행사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총 횟수	21	35	52	59	70	69	95	146
군관련행사	1	20	35	40	49	41	22	56
%	4.7	57	74	67	70	59	23	38

*출처: 전현준, 『김정일 정권의 분야별 정책변화 추이 분석: 노동신문 1994. 7. 4 - 2001. 11. 31) 사설·정론·논설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27.

3) 정권에 대한 사회의 높은 결속도

마지막으로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으로 시작된 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이완현상을 극복함으로써 정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결속을 도모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뤄졌다. 첫째로 북한은 2000년 들어 1995년부터 3년간의 홍수 등의 자연재해와 주체농법의 실패로 인한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인 ‘고난의 행군’ 극복을 선언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이완현상을 극복할 수 있었다. ‘고난의 행군’시기 북한의 실질경제성장률은 -6.8%까지 떨어졌는데, 곡물생산량마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식량배급체제도 붕괴되었다.¹⁵⁷⁾ 이로 인한 북한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매우 높았는데,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넘는 탈북자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김정일은 1999

157) 『조선일보』, 2001. 3. 2. ; 『노동신문』, 1999. 6. 27



년부터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대북제재해제와 대규모 대북 지원을 이끌어 냄으로써 경제난을 해소하고자 했다.¹⁵⁸⁾ 이와 더불어 김정일은 이념만 앞세워 실익을 배척하던 모습을 버리고 “경제사업에서는 결정적으로 실리주의로 나가야합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김정일이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주민들에게 보여주어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하였다.¹⁵⁹⁾ 이와 같은 김정일 정권의 노력으로 북한은 2000년 10월 6년간의 ‘고난의 행군’의 종료를 선언하고 북한내부의 총체적위기를 극복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잠재울 수 있었다.¹⁶⁰⁾

두 번째로 김정일은 ‘선군정치’와 ‘공포정치’를 활용하여 정권에 이완되어 있는 주민들을 숙청함으로써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결속을 도모하였다. 먼저,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활용하여 경제난으로 인해 정권에 이완되어 있는 주민들을 통제하였다. 북한은 공장, 기업소, 집단농장, 운수, 철도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전 부분에 군대를 투입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했고 1997년 들어 북한의 전 사회는 군부의 통제 하에 놓였다.¹⁶¹⁾

158) 송호근, 앞의 글, pp. 307-309.

159) 김정일은 실리주의의 강조차원에서 경제생활에서 사적 요소의 부분적 허용과 시장경제요소의 점진적 도입, 내각의 권한강화, 당 경제의 축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활성화, 남북철도연결, 일본인 납치인정 등 대내외적 변화를 보였는데 김정일 정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로 이것은 경제난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불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현성일, 앞의 책, p.292; 『로동신문』, 1999. 7. 22.

160) 2001년도 사설에서는 ‘강성부흥’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제시되었다. 북한은 지금 북한이 고난의 행군에서 ‘강성부흥’으로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기에 있어 “전체인민이 백전백승의 선군기치를 따라 천만대저기 달려들어도 눈썹하나 까딱하지 않을 배경으로 강성 부흥전에 나서야 한다”면서 주민들 간의 결속도를 더욱 높이하고자 했다. 『로동신문』, 2001. 6. 8

161) 오경섭, “북한체제주의 사회통제와 체제 내구성,” 『세종정책연구』, 제 5권.



이와 동시에 김정일은 ‘공포정치’를 활용하여 정권에 이완되어 있는 모든 북한주민들을 숙청함으로써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결속도를 높였다. 북한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간헐적으로 시행하던 ‘공개처형’을 확대 실시하여 정권에 대해 이탈된 행동을 하는 북한주민들을 처형했다. 1997년부터 2000년의 기간에는 전국적인 주민재등록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 하에 ‘심화조’를 구성하여 정권에 이완되어있다고 판단되는 2만 5천여 명의 간부, 당원, 주민들을 모두 숙청하기도 했다.¹⁶²⁾ ‘심화조’의 주민재등록사업은 김정일의 직접 지시 하에 이뤄졌는데, 김정일은 북한의 권력층으로부터 일반주민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있는 주민들은 모두 숙청함으로써 ‘공포’를 통해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결속을 높이하고자 하였다.¹⁶³⁾ 이와 같은 주민에 대한 통제와 숙청사업은 2000년 들어서 마무리 되었는데, 이러한 대대적인 통제와 숙청사업을 통해 2000년에서 2001년 시기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결속도를 이끌어 냄으로써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¹⁶⁴⁾

제 3절: 소 결

2000년에서 2001년 시기 북한은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하지 않았다. 이 시기 대남군사도발이 발생하지 않은 원인은 북한이 ‘외부 위협 수준’을 낮다고 인식하고, ‘정권의 취약성’ 또한 낮았기 때문이

제2호(2002), pp. 247-248.

162) 현성일, 앞의 책, pp. 392-393.

163) 황일도, “진 북한 핵심관료가 육필로 쓴 김정일 권력장악 비화,” 『신동아』, 제 553호(2005), p.134.

164) 이금순, 『북한인권백서』, (서울: 늘봄, 2009).



다. 본시기 북한과 미국, 한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이 이뤄지고 적대국으로 인식하던 수많은 서방국가들과 수교가 이뤄졌는데, 북한의 요청에 의한 대북제재해제와 대규모 대북지원도 실시되었다. 이에 북한의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다.

이와 더불어 김정일 정권이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유혼통치’를 종결하고 정권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정권의 취약성’ 또한 낮은 수준에 있었다. 김정일은 ‘선군사상’을 핵심수단으로 한 ‘강성대국건설’을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제시하고 ‘고난의 행군’을 극복함으로써 이념적·실질적 정통성을 획득하였다. 더욱이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조직적·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배엘리트들의 결속도 또한 높았다. 2000년 들어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으로 시작된 ‘고난의 행군’의 극복을 선언하고 ‘선군정치’와 ‘공포정치’를 통해 정권에 이완되어있는 주민들을 숙청함으로써 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결속도 또한 높은 수준에 있었다.

이처럼 2000년에서 2001년 시기 북한의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과 ‘정권의 취약성’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다. 이로 인해 북한은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본시기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본고에서 제시한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하지 않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고의 핵심 가설을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



제 5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김정일 정권시기 북한이 왜 대남군사도발을 감행하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연평도포격사태와 2000년에서 2001년 시기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요약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국정부가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억지전략을 구축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관련 연구에 있어서의 이론적 함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추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제 1절: 요 약

‘김정일 정권시기 북한이 왜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하는가?’에 대한 본 연구의 핵심주장은 북한이 국제체제수준의 변수인 ‘위협 수준’을 높다고 인식하고, 국내체제수준의 변수인 ‘정권의 취약성’이 높을 때, 대남 군사 도발을 전략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본고에서 제시한 핵심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2010년 발생한 연평도포격사태와 대남군사도발이 발생하지 않은 사례인 2000년에서 2001년 시기를 분석하였다.

먼저, 2010년 연평도포격사태를 통해서 본 연구의 주장을 검증해 본 결과, 북한은 ‘외부위협 수준’을 높다고 인식하고 ‘정권의 취약성’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자 두 변수의 수준을 완화해 정권의 생존을 담보하고자 연평도포격을 전략으로 선택하였다. 먼저, 북한은 높은 외부위협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 연평도포격을 일종의



강압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연평도포격이 발생하기 전 북한의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은 천안함폭침사건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지원의 중단, 한·미의 계속되는 군사훈련, 중국의 불안정한 지지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다. 북한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한·미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중국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했지만 이 노력들도 모두 실패로 귀결되었다. 이에 북한의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은 최고조의 상황에 놓였고, 북한은 외부위협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 고강도 강압전략으로 연평도포격을 선택하였다. 북한은 연평도포격을 통해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감을 조성하여 주변국들을 압박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중국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어 현재의 국면을 북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북한은 이처럼 연평도포격을 통해 ‘높은 외부위협’의 수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연평도포격을 수단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던 정권의 취약성 또한 완화하고자 하였다. 북한 정권의 취약성은 김정일의 건강악화로 갑자기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김정은의 부족한 이념적·실질적 정통성과 정권에 대한 지배엘리트와 주민들의 이완현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평도포격은 이념적·실질적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제적 업적을 마련해주고, ‘외부의 적’에 대한 실제적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배엘리트들과 주민들의 결속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었다. 이에 북한은 연평도포격을 통해 ‘선군사상’을 실제 행동화함으로써 김정은의 부족한 이념적·실질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정권에 대해 이완되어 있는 엘리트들을 가려냄으로써 엘리트들 결속을 도모함과 동시에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여 정권의 취약성



을 완화하고자 했다. 즉, 본고에서 제시한 가설과 같이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한·미의 군사훈련, 중구의 불안정안 지지로 ‘외부위협 수준’을 높다고 인식하고 김정은의 부족한 정통성, 정권에 대한 지배엘리트와 주민들의 이완현상으로 ‘정권의 취약성’이 높은 수준에 이르자 이 두 변수의 수준을 완화하여 정권의 안정적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대남 군사도발을 수단으로 선택하였다.

연평도포격사례와 달리 2000년에서 2001년의 시기는 북한의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정권의 취약성’ 또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이 발생하지 않았다. 본 사례는 연구에서 제시한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을 일으키는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사례로 이 시기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이 발생하지 않았던 원인은 북한의 낮은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과 ‘정권의 취약성’ 때문이었다.

먼저, 2000년 들어 북한의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은 북한과 서방 세계와의 관계 정상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대규모 대북 지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다. 북한 ‘정권의 취약성’ 또한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이 정권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킴에 따라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다. 김정일은 ‘선군사상’을 핵심 수단으로 ‘강성대국’건설을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제시하여 이념적·실질적 정통성을 획득했으며,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조직적·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하여 정권에 대한 지배엘리트들과 주민들의 결속도를 높였다. 이로 인해 2000년에서 2001년 시기 북한의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과 ‘정권취약성’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고, 북한은 이러한 우호적인 대내외적인 조건들로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결국,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권의 안정적 생존을 담보할 수 있었던 북한은 본 시기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에 따라 연평도포격사건과 2000년에 서 2001년 시기의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아래의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은 ‘외부위협 수준’을 높다고 인식하고 ‘정권의 취약성’ 수준 또한 높을 때 두 변수의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0년과 2001년의 사례처럼 두 변수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북한은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결국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원인에 대한 본고의 핵심주장인 북한이 ‘외부위협 수준’을 높다고 인식하고 ‘정권의 취약성’이 높을 때 대남군사도발을 감행한다는 주장이 적실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6> 사례 분석 요약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	
		낮 음	높 음
정권	높 음	“	연평도포격사건
취약성	낮 음	2000년~2001년	“

제 2절: 함 의

북한이 ‘외부위협 수준’을 높다고 인식하고 ‘정권의 취약성’이 높을 때 대남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이론적 함의를 제공한다.



1) 정책적 함의

본 연구결과는 추후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전략이나 대북정책이 북한의 ‘외부위협수준’에 대한 인식을 완화하고 ‘정권의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이것은 한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을 둘러싼 외부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해 ‘외부위협’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낮춤과 동시에 북한정권의 정체성의 변화를 유도하여 ‘수령절대주의와’ ‘선군독재’로부터 오는 정권의 취약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차원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이나 전략은 둘 중에 한 가지 변수만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전개되어 왔는데, 이로 인해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다. 김대중 정권은 북한정권의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분명한 인식 없이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북한의 외부환경을 우호적으로 형성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2002년 부시정권의 출범으로 외부환경이 악화되자 제 2차 연평해전에 직면했고, 북한 정권의 정체성 변화에만 집중하여 ‘외부위협’수준을 관리하지 못했던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연평도포격사건에 직면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추후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 김대중 정부의 북한의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을 관리하는 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정권의 취약성’을 관리하는 정책이 절충되는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본고에서 제시한 두 변수의 수준을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억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적대적이지 않은 봉쇄’와 ‘구조적 관



여’는 북한의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과 ‘정권의 취약성’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을 막는데 있어 효과적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적대적이지 않은 봉쇄’란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군사도발에 대해 철저한 경계와 대비를 하면서도 북한의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북한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물리적 유인을 일정 수준에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이와 같은 인도적 차원의 물리적 유인을 제공시에는 물리적 유인이 북한의 군사적 이득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구조적 관여’란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물리적 유인을 북한 정권의 변화와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¹⁶⁵⁾ 이와 같이 북한의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을 관리하고 북한정권의 정체성 변화를 유도해 ‘정권의 취약성’을 낮추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본 전략은 단기적으로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북한을 ‘정상 국가화’하는데 있어 한국 정부에게 매우 효과적인 대북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 한국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노력이 같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국제체제 차원에서 한반도의 문제는 동북아의 문제라는 인식아래 국제사회가 다자주의 제도나 틀을 이용해 한편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안보를 보장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경제과 민주주의’에 의한 ‘구조적 관여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두 변수의 수준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정전체제 아래서 기본적인 자국의 안전에 대한

165) 여기서 제시한 ‘적대적이지 않은 봉쇄’와 ‘구조적 관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조. 전재성, “관여정책의 국제정치이론적 기반과 한국의 대북 정책,” 『國際政治論叢』, 제 43권. 제 1호(2003).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정권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관여 정책도 수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국들이 협조 아래 다자적 틀이나 제도를 통해서 북한의 군사적 안보를 보장해주는 안전보장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잠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정권의 취약성’을 낮추는 ‘구조적 관여’를 실행할 때 정책의 실효성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¹⁶⁶⁾

이와 더불어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본 정책이 초당파적 합의를 통해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정책은 항상 국내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정권에 따라 대북정책이 극과극을 달려왔는데 이것은 북한에게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북정책이 변한다는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당의 합의하에 대북정책을 수립하여 북한에게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바뀌지 않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대적이지 않은 봉쇄’와 ‘구조적 관여’라는 전략이 국제사회의 협조와 초당파적 합의하에 수립될 때 궁극적으로 북한을 ‘정상 국가화’하여 군사도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66) 동서독의 경우 동독은 바르샤바조약기구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고 1972년 기본 조약을 통해 실제적인 주권국가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서독의 경제적, 정치적 관여를 수용하였다. 동독은 북한과 달리 정진체제와 같은 불안정한 대립체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관여를 상대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진체제 속에서 기본적인 체제안전을 위협받는다고 느끼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구조적 관여를 취하기 위해서는 다자적 기구를 통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전재성, 앞의 글.



2) 이론적 함의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원인에 관해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이라는 국제체제변수와 ‘정권 취약성’이라는 국내정치적 변수를 일반적 분석의 틀을 통해 살펴본 본 연구는 앞으로도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의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두 변수를 모두 고려한 이론적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국 전쟁 이래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원인을 국내체제와 국내정치적 변수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이러한 접근을 시도한 소수의 저작들 중에서도 정교한 이론적 분석과 깊이 있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연구가 북한 정권의 본질과 특성, 김정일 개인의 공격적 성향 등의 국내체제적인 변수나 외부위협수준, 위기조성을 통한 국면전환 등 국제체제적인 변수 등의 한 가지 변수에 의거해 분석되었으며, 정확하고 과학적이며 이론적인 분석은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¹⁶⁷⁾

167)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이미 국제체제적인 요인 외에 국내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적 요인들이 국제정치와 외교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다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로즈노우의 연구를 들 수 있으며, 엘리스과 같은 경우 국내정치적 요소 중 관료정치를 강조하였다. 홀스티와 저비스는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책결정자의 세계와 밖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푸트남과 같은 경우는 국내적 요인과 국내 정치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했다. 이처럼 국가의 행동을 분석하는데 있어 국제정치학계에서는 국제체제적 요소와 국내정치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경향은 추후 북한 관련 연구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Rosenau, 1980; Graham Allison,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1); Ole R. Holsti, "The Belief System and National Images: A Case Study,"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 No3.(1962); Robert Jervis, *Ibid.*; Robert Jervis, "Hypotheses on



본 논문은 이처럼 이론적, 과학적 기반을 결여한 채 하나의 변수로만 분석되어온 기존의 연구경향이 대남군사도발을 방지하는 전략을 구축하는데 있어 기여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국제체제수준의 변수와 국내정치적 수준의 변수를 모두 이용하여 대남 군사도발 원인에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북한 관련 연구에서도 본 연구에서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두 수준의 변수를 모두를 고려하여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에 관한 통합적 이론체계를 구축할 때 한국정부가 제대로 된 대북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절: 논의의 확장

북한의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과 ‘정권 취약성’이라는 두 변수를 통해 연평도포격사건과 2000년에서 2001년 시기를 분석한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논의를 확장 할 수 있다.

첫째로, <표 7>의 각 셀에 속하는 가설과 사례를 추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본 연구를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평도포격사건은 <표 7>의 (Cell 2)에 속하는 사례로 두 변수의 수준이 모두 높아 대남 군사도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이며, 2000년에서 2001년의 시기는 (Cell 3)에 속하는 사례로 두 변수의 수준이 모두 낮아 대남 군사도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사례이다. 본 연구의 가설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Cell 1)과 (Cell 4)에 속하는 사례도 분석하는 것이 요구되나, 본고에서는 소수의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어 나머지 사례에

Misperception," *World Politics* 20(April 1968).



대한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군사 도발 원인에 관한 본 연구의 논의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추후 (Cell 1)과 (Cell 4)에 속하는 사례도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두 변수의 수준에 따라 <표 7>의 (Cell 1), (Cell 2), (Cell 3), (Cell 4)에 속하는 4개의 가설을 도출하여 각 가설 간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간의 우위를 밝혀낸다면 본 연구의 논의가 더욱 풍부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곧,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을 결정하는데 있어 ‘외부 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과 ‘정권 취약성’이라는 두 변수 중에 어떤 변수가 더 결정적 변수인가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을 통해 논의를 확장해 나간다면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원인에 대한 더욱 구체적이고 밀도 있는 이론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 김정일 정권시기 변수의 변화에 따른 대남 군사도발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	
		낮 음	높 음
정 권 취 약 성	높 음	(Cell 1) 1994년~1997년 군사도발 발생하지 않음	(Cell 2)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포격사건 연평도포격사건
	낮 음	(Cell 3) 2000년~2001년 군사도발 발생하지 않음	(Cell 4) 2004년~2007년 군사도발 발생하지 않음



둘째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평도포격사건과 같은 경우 연평도포격 바로 몇 달 전 천안함폭침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외부 위협수준’과 ‘정권 취약성’이 높아 대남 군사도발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결국 북한의 군사도발로 인해서 두 변수의 수준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표 7-1> 김정일정권 시기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발생 여부

시기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	정권 취약성	군사도발 발생여부
'94-97	낮음	높음	발생하지 않음
'98-99	높음	높음	제 1차 연평해전
'00-01	낮음	낮음	발생하지 않음
'02-03	높음	높음	제 2차 연평해전
'04-07	높음	낮음	발생하지 않음
'08-11	높음	높음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포격사건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표 7-1>의 김정일 정권 전체시기의 두 변수의 변화와 대남 군사도발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충분히 해소 할 수 있다. <표7-1>의 1994~1999년의 시기만 살펴보더라도 1994~1997년 시기 낮았던 북한의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이 1998년 들어와 높아지면서 제 1차 연평해전이 발생했다. 이것은 두 변수의 변화와 대남 군사도발 발생 간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함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군사도발로 인해 두 변수의 수준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과 ‘정권취약성’이라는 두 변수가 높아짐에 따라 대남 군사도발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도발 인해 두 변수의 수준이 높아진 것이다’라는 반론은 추후 연구에서 김정일 정권시기 더 많은 대남 군사도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의 빈도수와 강도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뤄진다면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에 관한 통합적 이론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대청해전을 시작으로 천안함폭침사건, 연평도포격사건에 이르기까지 최근 들어 북한의 군사도발의 빈도수와 그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에 대한 분석은 매우 소수의 저작에서만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의 원인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대남 군사도발의 빈도수와 강도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뤄진다면 한국정부가 북한에 대한 총체적 대북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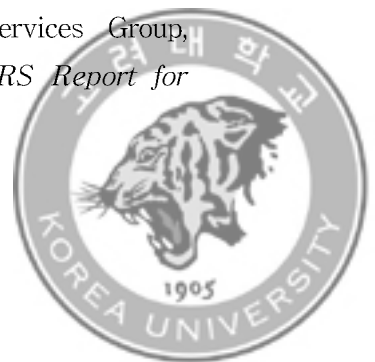




참 고 문 헌

[영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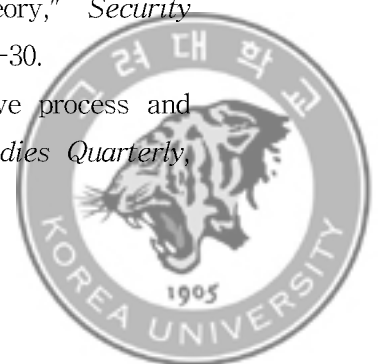
- Allison, Graham.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Boston: Littls, Brown and Company), 1971.
- Beck, Peter M., "North korea in 2010," *Asian Survey*, Vol 51. No. 1 (January/ February 2011).
- Byman, Daniel · Lind, Jenifer. "Phyonyangs Survival Strateg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5, No. 1 (Summer 2010). pp.44-74.
- Brecher, Michael. *The Foreign Policy System of Israel: Setting Image, Process*(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 Cable, James. *Gunboat Diplomacy 1919-1991*, London: Macmillan Press, 1981.
- Cha, Victor · Kang, David. "The Debate over North korea."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9, No. 2 (Summer 2004). pp. 229-254.
- Choi, Jong Kun. "A Neo-Classical Realist Account on External Security Behaviors of Weak Power towards Great Power: The US-Libya From 1977-1992." *The Korean Journal International Relations*, Vol 47. No. 5 (2007). pp. 87-112.
- Denny Roy, "North korea and the Madman Theory," *Security Dialogue*, 25 (1994).
- Drennan, William M., *Mistrust and the Korean peninsula: dangers of miscalculation*,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for Peace, Nov. 1998.
- Easton, David, "An Approach to the Analysis of Political Systems," *World Politics*, (April, 1957).
- Fishcher, Hannah. Information Research Knowledge Services Group, "North korean Provocative Actions: 1950-2007." *CRS Report for Congress*, (April 2007).



- Fordham, Benjamin. "The Politics of Threat Perception and the Use of Force: A Political Economy Model of U. S Uses of Force, 1959–1994."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1998). pp. 567–590.
- Fox, Annette B, *The power of Small state, Diplomacy of World war I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9.
- George, Alexander. *Forceful Persuasion: Coercive Diplomacy as an Alternative to War*, Washington: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1
- George, Alexander L. and Bennett, Andrew,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London; MIT press, 2005.
- Gilpin, Robert.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Hagan Joe D. "Regimes, Political Opposition,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Policy," in Charles F. Hermann, Charles W. Kegley, Jr., and James N. Rosenau, eds.,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Foreign Policy* (Boston: Allen and Unwin), 1987.
- Han, Sung Joo. "The Yeonpyong Shelling: North Korean Calculations," *The Trilateral Commission 11th Pacific Asian Regional Meeting*, (December 2010), pp. 2–30.
- Holsti, K. J, *Why Nations Realign*,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2.
- Holsti, Ole R. "The Belief System and National Images: A Case Study,"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 No3 .(1962)
- Jervis, Robert.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 King, Gary Keohane, Robert and Verba, Sidney. *Designing Social Inquiry: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Lee Jung-Hoon and Cho Il Hyun. "The North Korean Missiles: A Military Threats or a Survival Kit?,"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12, No. 1 (2000), pp.
- Lee, Dong Sun. "Causes of North Korea Belligerence,"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66, No. 2, (April 2012), pp.
- Levy, Jack. "Prospect Theory, Rational Choice, and International



-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1-1.
- Manning, Robert A., ed. *North Korean Foreign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Hong Ko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1998.
- Mansurov, Alexander. ed.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the Nuclear Issue and the Korean Peninsula*, Armonk: M. E. Sharpe, 1997.
- Manyin, Mark E. and Mary Beth Nikitin. "U.S. Assistance to North Korea," *CRS Report for Congress*.
- Mastanduno, Michael David A. Lake and G. John Ikenberry. "Toward a realist Theory of State Ac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3 (1989).
- McEachern, Patrick. *Inside the Red Box: North Korea's Post totalitarian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 Olsen, Edward A. "The Arms R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ian Survey*, 26-8 (1986).
- Olsen, Edward A., ed.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Boulder/London: Lynne Rienner, 1998.
- Park, Changhee · Yoo, Dongwon · Shi, Yinhong. *Measures for ROK-Chinese strategic cooperation to deter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 Seoul : The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011.
- Paul, Thazhakuzhyil. *Asymmetric Conflicts: War Initiation by Weaker Pow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Rosati, Jerel A. · Hagan, Joe D. · Sampson III., Martin W. *Foreign policy Restructuring: How Governments Respond to Change*, South Carolina: th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1994.
- Roy, Denny. "North Korea and the 'Madman' Theory," *Security Dialogue*, Vol.25, No. 3 (September 1994), pp. 307-30.
- Shapiro, Michael J. and Bonham, G. Matthew. "Cognitive process and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 17 (June 1973), p.161.
- Snyder, Scoot · Byun, See woon. "Cheonan and Yeonpyeong: The Northeast Asian Response to North Korea's Provocations." *The Rusi Journal*. 156 (2011). pp.74-81.
- Schweller, Randall, "Band 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Summer 1994).
- Smith, Hazel. "Bad, Mad, Sad or Rational Actor? Why the 'Securitization' Paradigm Makes for Poor Policy Analysis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Affairs*, 76-1 (2000).
- U.S Department of State, "U.S.-D.P.R.K. Joint Communiqué", *U.S Department of State*, (October 2000).
- Walt, Stephen M, "Alliance Formation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Spring 1985),
- _____.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1979.

[국 문]

- 간대욱, "김지일 시대 북한 권력 엘리트의 특성." 『社會科學研究』. 제 17집 제 1호(2001). pp. 21-44.
- 강명도.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서울: 중앙 M&B, 1995.
- 고미 요지 지음. 이용택. 『안녕하세요 김정남입니다 : 방탕아인가, 은둔의 황태자인가? 김정남 육성 고백』. 서울 : 중앙M&B, 2012.
- 고유환. "북한의 대내 정치와 대남정책의 상관성 분석." 『통일경제』, 제 25호, (1997), pp.42-52.
- 김경숙. "2000년 이후 북한 신년공동사설을 통해본 북한의 대남정책." 『북한연구』, 제 10권(2008), pp.1-8.
-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벼랑에 선 줄타기 외교의 선택』. 서울: 백산서당, 2002.



-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서울: 백산서당, 2002.
- 김구섭. 『김정일의 군 인맥 및 군사정책 결정구조 분석』. 서울: 한국 국방연구원, 1996.
- 김봉호. 『선군으로 위력 떨치는 강국 평양』. 평양: 평양출판사, 2005.
- 김연수. “김정은 승계체제 권력구조의 특징,” 『안보현안분석』. 제 53권 (2010).
- 김연수. “북한의 대내·대남 정책평가: ‘후계계승의 정치와 정통성 문제를 중심으로.” 『신아세아』, 제 17권 제2호 (2010).
- 김열수.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 심리전인가, 실체인가?” 『통일로』, (2009), pp.1-20.
- 김열수. “북한의 무력도발위협; 심리전인가, 실체인가?” 『통일로』, (2009).
- 김영환.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정치적 의미와 북한정세 전망,”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NK Vision』, 통권 18호.
- 김용오·명석영. “북한외교정책연구의 국내외 경향의 분석과 대안의 모색.” 『통일문제연구』, 제 48호 (2007), pp.24-44 .
- 김용현. “공식승계후 국가기능 정상화에 집중.” 『통일한국』 (1997).
- 김인옥. 『김정일장군 선군정치 이론』. 평양: 평양출판사, 2003.
- 김정일. 『김정일 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 김정일. 『김정일 선집 1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 김진무. “북한의 대남정책결정과정에서 군부의 역할.” 『통일정책연구』 제11권, 제2호 (2002), pp. 42-52.
- 김태운. “최고정책결정권자의 대외인식과 북한의 외교정책.” 『한국동북아논총』 제 34집 (2005). pp 122-140.
- 김학성. “2000 대북포용정책 추진 2년의 평가.” 『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제 8호 (2001), pp. 8-9.
- 김학린·임재형. “북한의 위기관리체제와 당·정·군 관계.” 『한국정당학회보』, 제 65권 제 1호 (2007), pp. 109-129.
- 남성욱. “2011년 심묘년 한반도 통일의 급행열차를 타고 싶다.” 『통일시대』 제68호 (2011).
- 문순보. “천안함 도발, 연평도 포격: 원인과 교훈.” 『2011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안보국방 학술회의』, pp.200-219.



- 미찌시마 나루시게.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 박병철, 주인석.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변화와 전망."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제10권 제3호 (2010).
- 박영호.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와 평화공존." 『통일연구원 연구 총서』, 제 23호 (2002), pp.35-42.
- 박용욱.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 기본 과제와 제언." 『New Asia』, (Spring, 2008), pp.10-18.
- 박형중. "김정일의 중국방문의 두 가지 의도: 전술적 국면전환과 2012년 전략적 기반조성."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2011).
- 박형중. "2010년도 김정은 동향과 정치적 함의."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2011), pp. 1-18.
- 박형중. "주민불만표출 공안사건 빈발할 듯." 『통일한국』, 제 326호, (2011), pp.1-18.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특별인터뷰: 이갑진 전 해병대사령관." 『NK Vision』, 제19호(2011), pp.20-25
- 빅터차·데이비드 강. 『북핵퍼즐: 빅터 차 vs. 데이비드 강 관여 전략 논쟁』. 서울: 따뜻한 손, 2007.
- 서대숙. 『현대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 서대숙. 『현대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 김갑식. 『김정일 정권의 권력구조』.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5.
- 서보혁. "탈냉전기 한반도 안보질서 변화에 관한 연구: 남 북 미 전략적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 14권, 제 2호(2008), pp. 70-74.
- 서재진. "북한 신사고론의 의도 및 내용 분석." 『통일연구원 통일 정세 분석』, 제1호 (2001), pp.1-10.
- 송상원. 『불멸의 향도: 충검을 들고』. 평양, 문화예술 종합출판사, 2002.
- 송호근.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 『월간조선』, (1997), pp. 300-307.
- 스페판 해거드·마커스놀랜드, 이형욱 옮김. 『위기의 북한경제와 한반도 미래, 북한의 선택』.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07.
- 신상진. "중국의 대북정책과 6자회담." 『북한경제리뷰』. (2011), pp.



- 신정현. “북한의 신외교정책,” 『북한의 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신종대. “북한 위기조성전략의 분석과 전망.” 『한반도 정세: 2010년 평가와 2011년 전망』,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2011), pp.15- 24.
- 양성철 · 강성학 공편. 『북한외교정책』. 서울: 서울프레스, 1995.
- 오경섭. “북한정권의 본질과 대남도발의 함수관계.” 세종연구소, 『2011 대북정책 Symposium: 북한 체제지속여부와 대북정책과제』.
- _____. “북한체제주의 사회통제와 체제 내구성.” 『세종정책연구』, 제 5권, 제2호,(2002), pp. 240-248.
- 오버더퍼. 이종길 옮김, 『두개의 한국』. 서울: 길산, 2002.
- 오성길. 『사회주의에 대한 주체적 이해』. 평양: 평양출판사, 2006.
-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과 도발의도.” 세종연구소, 『제24차 세종국가 전략포럼: 한국안보정책, 어디로 갈 것인가?』.
- 이금순. “대북 인도적 지원개선방안: 개발구호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제 32호 (2000).
- 이금순. 『북한인권백서』. 서울: 늘품, 2009.
- 이기동. “북한 경제개혁의 정치적 조건과 영향: 화폐개혁 조치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 19권, 제 1호(2010), pp. 166-170.
- 이대근. 『북한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는가: 김정일시대 선국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 이수석. “2012 북한의 대남정책 방향과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1).
- 임재형. “북한외교정책결정과정의 특징과 군의 역할: 김정일 시대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 6권 제1호(2002).
- 장노순. “약소국의 갈등적 편승외교정책: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 『한국정치 학회보』 제33집 1호,(1999).
- 전성훈. “제2 차 6 자회담 이후 북핵문제 해결 전망,” 『통일연구원 학술 회의 총서』. 제4호.
- 전인영. “북한의 외교정책: 특징과 변화.”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 연구』 제 32권, 제1호 (1989).
- 전재성. “관여정책의 국제정치이론적 기반과 한국의 대북정책.” 『國際政



- 治論叢』. 제 43권. 제 1호(2003)
- 전현준. 『김정일 정권의 분야별 정책변화 추이분석-로동신문 (1994.7.4 ~ 2001.11.31) 사실·정론·논설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정경환. "김대중 정권 대북정책의 비판적 고찰." 『통일전략』, 제 11권, 제 2호, (July, 2011), pp.55-62.
- 정규섭. "김정일 정권의 천안함 도발 동기 분석." 『국방연구』, 제 53권, 제 3호(2010), pp. 1-18.
- _____.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서울: 일신사, 1997.
- 정성상. "김정일의 선군정치: 논리와 정책적 함의." 『현대북한연구』 제 4집 2호(2001).
- _____. "김정은 후계체계의 공식화와 북한권력체계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 14권 제2호(2010).
- _____. "김정은 후계체계의 공식화와 북한권력체계변화."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제 14권 제 2호(2010 가을).
- _____.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1997 VS. 2007』. 서울: 세종연구소, 2008.
- 정영태 외 4명. "2001년도 북한의 대내외 정책 전망." 『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제 2호 (2001), pp. 3-4;
- 정영태. "북한 강성대국론의 군사적 의미: 김정일의 군사정책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 7권 2호(1998).
- 정재욱. "북한의 군사도발과 전략적 과제." 『2011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 안보국방학술회의』 (2011). pp. 187-208.
- 조선로동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혁명위업 계승문제의 빛나는 해결』.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조재욱·이제성·박경우·주성열. "북한의 위기조성전략에 관한 고찰: 전망 이론에 의한 인식론적 접근." 『국방연구』, 제 54권, 제 3호, (2012).
- 진무. "북한의 대남정책결정과정에서 군부의 역할." 『통일정책 연구』 제 11권 2호 (2002).
- 최강. "천안함 사건과 한반도 안보상황 전망," 민주통일중앙협의회. 『통일』, (2010).
- 최완규.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韓國民族文化』,



- (1999).
- 최용섭. “북한의 도발행위와 대북포용정책: 동해 잠수정 침투사건과 서해안
영해 침범 사건을 중심으로.” 『國際政治論叢』, 제 39집 2호 (1999).
pp. 233-248.
- 최주환. “북한군의 후방사업이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 『통일정책연구』,
제 1권, 제 2호(1998) pp.48-58.
- 통일부 정세 분석국. “북한의 2011년 신년공동사설 분석.” 『통일부』,
(2011).
- _____. “북한개요.” 『통일부』, (2000).
- _____. “북한동향.” 『통일부』, 제 489호 (2000).
- _____. “북한동향.” 『통일부』, 제 501호 (2000).
- 한병진. “북한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가전략』 제 15권
제 1호 (2009), pp.120-129.
- 한병진. “북한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가전략』 제 15권
제 1호 (2009), pp.12-19.
-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 용어사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2006.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07.
- 황일도. “진 북한 핵심관료가 육필로 쓴 김정일 권력장악 비화.” 『신동아』,
제 553호(2005),
-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 황장엽. 『황장엽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시대정신,
2006.
- 황장엽.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 서울: 시대정신, 1999.
- 히라이 하사시. 『김정은 체제 : 북한의 권력구조와 후계』. 파주 : 한울
아카데미, 2012.

[신 문]

BBC

The Korea times



The Economist

Washington Post

『경향신문』, 2011. 12. 25.

『로동신문』, 1999. 6. 16.

『한국일보』, 2011. 12. 23.

『Daily NK』. 2011. 1. 10.

『연합뉴스』, 2010. 11. 23.

『중앙일보』

『세계일보』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연합뉴스』

『메일경제』

『아시아투데이』

『조선신보』

『열린북한방송』

『동아일보』

『朝日新聞』

[인터넷 자료]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1/01/19/us-china-joint-statement>(검색일: 2012. 6. 10);

<http://www.presidency.ucsb.edu/ws/?pid=49643>.(검색일: 2012. 4. 20.)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241>

(검색일: 2012. 4. 30)

<http://fts.unocha.org> (검색일: 2012. 9. 20)

<http://ecos.bok.or.kr> (검색일: 2011. 10. 11)

